제 3의
송파·수원 세모녀 사건
어떻게 막을 것인가?

일시 2022.**10.26**. (수) **오전 10시**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

공동주최

사단법인 **선진복지사회 연구회**

국민의힘 약자와의동행위원회

국회의원 **김미애** 국회의원 **이종성**

후 원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협력단체 | 범사회시민단체연합, 사)한국지속가능기업연구회, 한국사회봉사단연합회, 한국공공복지연구소, 환경과복지를생각하는시민의모임, 한국여성사회복지사회

제3의 송파, 수원 세모녀사건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

일 시 | 2022년 10월 26일 (수) 오전10시

장 소 | 국회의원회관 제 9 간담회의실

후 원 |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공 동 주 최 | 국민의힘 약자와의동행위원회
사)선진복지사회연구회,
국회의원 김미애, 국회의원 이종성

<사단법인 선진복지사회연구회>는 복지 예산이 꼭 필요한 사람에게, 꼭 필요한 만큼, 꼭 필요 한 때에 골고루 투명하게 효율적으로 사용되고 전달되는지, 또 불법수급자가 없는지, 수급자들의 재화나 서비스에 남용과 오용을 막을 수 있는지 등을 지속적으로 시민운동차원에서 감시,감독 연구를 통한 시민 옴부즈만 역할을 하고, 대안 제시를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목 차

【축 사】 김 미 애 국회의원 ····· 9
이 종 성 국회의원 ····· 10

【주 제】 제 3의 송파, 수원 세모녀 사건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

【주제발표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포함 한 소득보장제도 개선방향
윤 성 원 입법조사관 (국회입법조사처) ····· 11

【토 론 문】 이 정 은 권익옹호부장 (한국사회복지행정연구회) ····· 27

【주제발표 2】 세모녀의 사회복지 - 현실과 대책
정 재 훈 교수 (서울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 35

【토 론 문】 김 태 완 연구실장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빈공평등연구실) ····· 51
정 중 규 정책실장 (한국사회복지정책연구원) ····· 57

【부 록】 본 연구회 (연혁/공지사항/ 협력기관 및 단체) 소개····· 63

프로그램

1 부 — 사회 : **석 춘 지** 前 성남위례종합사회복지관 관장

1) 개회선언

2) 국민의례

3) 인 사 말 ..... **이 정 숙** 사)선진복지사회연구회 회장

4) 축 사 .....**김 미 애** 국회의원

이 종 성 국회의원

5) 단체기념사진 ..... **모든 참석자**

2 부 — 사회 : **이 정 숙** 회장 사) 선진복지사회연구회

○ **주제발표 I**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포함 한 소득보장제도 개선방향

..... **윤 성 원** 입법조사관 (국회입법조사처)

○ **토 론**

.....**이 정 은** 권익옹호부장 (한국사회복지행정연구회)

○ **주제발표 II**

세모녀의 사회복지-현실과 대책

.....**정 재 훈** 교수 (서울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 **토 론**

.....**김 태 완** 연구실장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빈곤평등연구실)

.....**정 중 규** 정책실장 (한국사회복지정책연구원)

○ **참관자 질의/응답**

○ **총 마무리 발언** .....

축 사

김 미 애
국민의힘 국회의원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약자와의동행위원장을 맡고 있는 부산 해운대을 김미애의원입니다.

『제3의 송파·수원 세모녀 사건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함께해 주신 선진복지사회연구회 이정숙 회장님, 이종성 의원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발제와 토론을 맡아주신 전문가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8월 수원의 월셋집에서 빈곤과 병마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한 세 모녀의 죽음은 우리 사회의 복지 사각지대 현실을 적나라하게 드러냈습니다.

2014년 송파 세 모녀 사건 이후, 복지 3법 제·개정, 사각지대 발굴시스템 구축, 읍·면·동 중심의 복지기능 강화, 사회보장급여 신청장벽 완화, 상시적인 위기 가구 발굴체계 구축 등 다양한 노력이 이어졌지만, 시스템의 허점 사이로 또다시 한 가족이 추락한 것입니다.

올해 사회복지 분야 예산은 195조 원에 이릅니다. 엄청난 규모의 예산을 쓰고도 복지가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 도움의 손길이 미치지 못한 부분은 정부를 비롯하여 국회 및 관련 기관 모두 반성해야 할 대목입니다.

거주지 특정이 어렵고, 복지서비스를 신청하지 않으면서 이웃과 교류도 하지 않으면 찾아가 돕는다는 게 어려울 수 있지만, 찾기 어렵다고 손 놓을 일은 아닙니다. 복지 제도를 끊임없이 홍보하고, 적극적으로 찾아가는 행정서비스를 통해 위기 가구는 무슨 수를 쓰더라도 찾아내야 합니다.

오늘 토론회가 촘촘한 복지 행정으로 튼튼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바라며, 수원 세 모녀 비극을 막기 위한 다양하고 실질적인 방안이 제시되기를 기대합니다.

참여 해 주신 전문가 여러분들의 고견을 부탁드리며, 항상 건강 유의하시고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10월 26일
국민의힘 국회의원 **김 미 애**

축 사

이 종 성
국민의힘 국회의원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이종성 국회의원입니다.

'송파·수원 세모녀 사건 어떻게 막을 것인가'라는 주제로 개최되는 이번 토론회에 바쁜 일정 가운데 함께 해 주시기 위해 시간을 내어주신 내외빈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또한 오늘 토론회를 공동주최 해 주신 국민의힘 약자와의동행위원회 김미애 위원장님, 선진복지사회연구회 이정숙 회장님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2014년 송파에 거주하던 세모녀는 생활고로 고생하다 방안에서 번개탄을 피워 동반자살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8년이 지난 2022년 희귀병과 암투병, 그리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던 수원의 세모녀는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하였습니다. 두 사건은 모두 복지사각지대의 그늘에 가려진 수 많은 가정의 한 단면을 여실히 보여주며 우리 사회에 큰 충격과 과제를 안겨 주었습니다.

송파 세모녀 사건을 계기로 구축된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을 통해 발견 된 대상자중 수원 세모녀 사건처럼 연락이 두절된 경우가 3만 2906명이나 됩니다. 아직도 우리 사회에는 수 많은 세모녀와 유사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고통 받고 있는 가정들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는 보다 촘촘하고 능동적인 복지사각지대의 발굴을 위한 대안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IT기술 및 통신망을 적극 활용해 복지사각지대에서 길을 찾지 못하고 있는 약자들을 찾고 그들의 손을 잡아주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토론회를 통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포함한 소득보장제도 개선방향과 우리사회의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이를 지원 할 대안들이 반드시 제시되기를 간절히 기원해 봅니다.

다시 한번 오늘 토론회 준비를 위해 애써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 전하며 저 역시 국회에서 정책과 제도로써 여러분들과 함께 하며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해결을 위해 매진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뜻 깊은 토론회에 함께 해주신 모든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10월 26일
국민의힘 국회의원 **이 종 성**

[주 제 발 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포함한 소득보장제도 개선방향

윤 성 원 입법조사관

국회입법조사처

1. 송파 세 모녀 사건(2014년) 이후 복지 사각지대 해소 관련 제도 개선 상황[1)]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

○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 급여별(생계·의료·주거·교육) 다층화(2015년 7월)**

- 법 제2조, 제4조, 제4조의2, 제6조, 제8조, 제8조의2, 제11조, 제12조, 제12조의2, 제12조의3, 제18조의5 등
- 맞춤형 급여체계 시행(2015년 7월) 이전까지는 최저생계비라는 한 가지 기준을 정해두고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 모두를 지급하는 기준으로 활용. 해당 기준을 넘게 되면 모든 급여가 중단되었음
- 맞춤형 급여체계 시행 이후에는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하게 되며, 급여별 지급 기준은 생계급여는 중위소득의 30%,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6%, 교육급여는 50%
  -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 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 중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급여 종류별 선정기준 이하인 사람이 지급 대상

〈표 1〉 2022년 기준중위소득 및 가구 규모별 수급자 선정기준

(단위 : 원)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2022년 기준중위소득	1,944,812	3,260,085	4,194,701	5,121,080	6,024,515	6,907,004	7,780,592
생계급여 선정기준 (중위소득 30% 이하)	583,444	978,026	1,258,410	1,536,324	1,807,355	2,072,101	2,334,178
의료급여 선정기준 (40% 이하)	777,925	1,304,034	1,677,880	2,048,432	2,409,806	2,762,802	3,112,237
주거급여 선정기준 (46% 이하)	894,614	1,499,639	1.929,562	2,355,697	2,771,277	3,177,222	3,597,072
교육급여 선정기준 (50% 이하)	972.406	1.630,043	2,097,351	2,560,540	3,012,258	3,453,502	3,890,296

자료 : 서울특별시, 기초보장제도 안내 페이지

1) 보건복지부 제출자료(2022.08.28.)와 정부 안내자료, 통계청 자료 등을 바탕으로 정리.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폐지(2017년 11월~)**

(생계·교육·주거 급여 등 각 지침)

〈표 2〉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연혁 (2017~)

연도	내용
2017	-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 가구에 노인 또는 중증 장애인이 모두 포함된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로드맵 1단계 적용)
2018	-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로드맵 2단계)
2019	- 부양의무자 가구에 중증 장애인(장애인연금 수급자)이 포함된 경우, 생계/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로드맵 3단계) - 부양의무자 가구에 노인(기초연금수급자)이 포함된 경우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로드맵 4단계 조기 시행) - 만 30세 미만 한부모가구 및 보호 종결 아동에 대해서도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생계·의료급여)
2020	-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수급권자의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제외
2021	- 노인·한 부모 포함 수급권자의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제외 - 비노인, 장애인 수급자의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제외(10월)

자료: 보건복지부 제출자료, 2022.08.28.

- 현시점에서 부양의무자는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임. 단, 사망한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제외됨(아들・딸 사망 시, 며느리・사위는 제외)
- 현재 부양의무자 기준은 의료급여에만 적용되며, 주거, 교육, 생계급여에는 미적용됨. 다만 부양의무자가 연 소득 1억 원, 일반재산 9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됨
- 부양의무자 기준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충족됨
  -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 능력이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부양 능력이 미약한 경우로 수급권자에 대한 부양비 지원을 전제로 부양 능력이 없는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 제도의 단계적 완화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수급 가구가 약 30만 가구 증가하였고 수급자 수도 약 40만 명 가까이 증가하였음<표 3>

〈표 3〉 기초생활 보장급여 수급자 수 추이

(단위 : 가구, 명)

	2016	2017	2018	2019	2020
수급자 수(가구)	1,035,435	1,032,996	1,165,175	1,281,759	1,459,059
수급자 수(개인)	1,539,539	1,491,650	1,653,781	1,792,012	2,046,213

자료: KOSIS 국가 통계 포털

○ **(수급권 인정 확대) 가정위탁·아동복지시설 입소 아동 등에 대해 부모의 소득과 별개로 수급권을 인정**(2019년 10월, 법 제8조의2③)

□ **「긴급복지지원법」 개정**

○ (선지급 원칙 강화) '48시간 이내' 지급(2014년 12월) → '72시간 이내' 지급으로 조정(2021년~)

○ (지원기준 완화) 법 제2조(정의)에서 '위기 상황' 정의의 인정 범위 확대를 통해 지원 강화

○ 실직 및 출소자에 대한 위기 상황 인정기준 완화(2015년 1월~)

- (실직) 지원요청 기한은 실직한 날부터 3개월 내 → 6개월 내, 실직 전 근로기간은 6개월 이상 → 3개월 이상
- (출소자) 가구원 중 미성년, 65세 이상자, 장애인이 있는 경우 지원 대상에 포함
- 실직, 휴·폐업 등 위기 사유를 주소득자 외 '부소득자'까지 확대(2017년 11월~)
- 자연재해로 인해 주거생활을 하지 못하게 된 경우를 위기 상황에 추가(2019년 6월~)
- 코로나19로 인한 무급휴직 및 특고, 프리랜서 등의 소득감소를 위기 상황에 추가(2020년 4월~)

○ (지자체 재량 확대) 위기 상황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재량 확대(2015년 7월~)

- 법 제2조 '위기 상황'의 정의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추가

○ (신고 의무자 범위 확대) 법 제7조(지원요청 및 신고)의 긴급복지 신고 의무자의 범위를 지속 확대(2015년 7월~)

□ **「사회보장급여법」 제정 및 개정**

○ 송파 세 모녀 사건을 계기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정(2014.12.30 제정, 2015.7.1. 시행)

○ 공청회(2014.4.15)를 통해 2개 발의안을 병합하기로 합의하여, 상임위 대안으로 국회

본회의 통과(2014.12.9.)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및 제공에 관한 법률」 발의(2013.5.9, 김현숙 의원)
- 「사회보장수급권자의 발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발의(2014.3.28, 최동익 의원)

○ 이후 개정 경과

- (연계 정보 확대) 위기가구 발굴을 위한 연계 정보 확대
  - 복지 대상자 발굴 확대 및 정확도 제고를 위해 사회보장시스템을 통해 처리할 수 있는 정보(연체정보) 추가(2017년 3월) 제12조제1항제6호 신설 등
  - 위기가구 발굴을 위한 연계 정보에 통신 요금 등 연체정보 추가, 협조 기관으로 공공주택사업자 추가 등(2020년 4월) 제11조, 제12조제1항 개정, 제12조제2항 신설 등
  - 위기가구 발굴을 위한 연계 정보 확대(6개월 이상 보험료 체납 → 3개월)
  - (신고 의무자 범위 확대) 지원 대상자 발견에 따른 신고 의무자(공동주택 관리주체) 추가(2019년 12월) 제12조제1항3호 개정, 제13조제2항22호 신설 등
  - (통합사례관리 근거) 대상자별 맞춤형 서비스를 연계·제공함으로써 복지제도의 효과성·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통합사례관리 및 통합사례관리사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2017년 3월) 제42조의2 신설 등
  - (발굴 관련) '위기가구' 정의 신설, 구체적인 발굴 의무 부과 및 발굴체계 주기적 점검 등 내용(2018년 12월) 제9조의2, 제12조의2 신설 등
  - (복지 멤버십 근거 등) 급여 신청방식 다양화(전국단위 신청 등), 주기적으로 사회보장급여의 수급 가능성을 확인하여 그 결과를 안내하는 맞춤형 급여 안내(복지 멤버십) 제도 근거 마련(2020년 12월) 제5조 개정, 제22조의2 신설 등
  -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사회보장정보를 교육감에게도 제공할 수 있는 근거 마련(2021년 7월) 제12조제4항 개정, 제12조제5항~제7항 신설 등

2. 복지 사각지대 발굴 관련 내용[2)]

1) 복지 사각지대 대상자 발굴 및 지원 절차

□ 운영방식

○ ① 위기 징후 정보를 입수.통계 분석하여 조사대상자를 선별하여 지자체에 통보 ② 위기 정보가 입수된 전체 명단을 지자체에 제공해 지자체의 사각지대 발굴 지원(2020년 5월~)

- 회차별(2개월 주기)로 약 450만 명의 위기 정보 수집 대상자 중 고위험군 18만~20만 명(상위 2~3%)을 지자체에서 조사

2) 보건복지부 제출자료(2022.08.28.)를 바탕으로 정리.

□업무절차

○ 빅데이터를 수집·분석 ⇒ 복지 사각지대 가구를 예측·선별 ⇒ 지자체를 통해 상담·조사 후 ⇒ 복지급여·서비스 지원·연계

- 지자체에 위기가구로 통보된 대상자는 읍·면·동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를 통해 가구마다 일일이 확인 및 상담한 후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지원
- 중앙에서 위기가구로 선별하여 통보하는 대상(18~20만 명) 외에도 지자체에서 전체 대상자 명단(450만 명)을 활용하여 자체적으로 발굴 추진

〈그림 1〉 공공 빅데이터를 활용한 위기가구 사전발굴 방식

자료: 보건복지부 제출자료, 2022.08.28.

1) 복지 사각지대 대상자 관리의무 관련

□ **법적 근거 및 추진내용**

○ 「사회보장급여법」 제12조의2(발굴조사의 실시 및 실태점검) 및 시행규칙 제1조의3(발굴조사의 실시 등)

○ 지자체별로 연도별 복지 위기가구 발굴조사 결과 및 우수 운영사례 등을 점검

□ **지원의 종류 및 비율**

○ 읍·면·동에서 발굴 대상 가구마다 상담을 통해 받을 수 있는 급여 및 서비스를 지원 및 연계하고 있으며

- 중앙부처와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모든 복지 급여·서비스가 지원 대상 사업이 되며, 그 외 지역 내에 가능한 민간자원을 연계
- 복지 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을 통해 고위험 가구 458만 명을 발굴하여, 지자체 조사를 통해 총 188만 명(기초생활보장 110,869명, 차상위 47,176명, 긴급복지 58,787명, 기타공공서비스 371,935명 등)에게 먼저 찾아가서 공공·민간 복지서비스 지원(2015년~2022년 7월)

〈표 4〉 연도별 복지 사각지대 조사대상자 및 지원 내역

발굴 년도		발굴 대상자 (A)	지원율 (B/A)	복지서비스 지원 내역*					
				계 (B)	기초 생활보장	차상위	긴급 복지	기타 공공 서비스*	민간서비스 연계**
계		4,583,673	41.0	1,880,863	110,869	47,176	58,787	371,935	1,291,438
2015년		114,609	16.0	18,318	1,966	961	702	10,367	4,322
2016년		208,653	22.4	46,780	3,064	6,573	719	20,278	16,146
2017년		298,638	25.7	76,638	6,712	8,537	1,109	31,412	28,868
2018년		366,755	36.4	133,490	18,345	6,588	1,663	38,860	68,034
2019년		633,075	36.0	228,009	17,674	3,825	3,276	42,099	161,135
2020년		1,098,134	40.3	442,652	23,723	5,243	25,374	74,019	314,293
2021년		1,339,909	49.5	663,874	28,611	11,180	19,664	105,740	498,216
2022년	1차	162,244	53.2	86,254	4,180	1,571	2,065	24,948	53,439
	2차	155,908	50.2	78,231	2,964	1,155	1,700	11,455	60,891
	3차	205,748	51.8	106,617	3,630	1,543	2,515	12,757	86,094
	계	523,900	51.7	271,102	10,774	4,269	6,280	49,160	200,424

* (기타 공공서비스) 장애인연금, 사회서비스이용권(노인 돌봄, 장애인 활동 지원 등), 요금감면 등

** (민간서비스) 공동모금회, 푸드뱅크, 대한적십자사 희망 풍차, 민간기관 결연후원금 등

자료: 보건복지부 제출자료, 2022.08.28.

3. 복지 사각지대 문제 개선방안 논의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사각지대 개선방안 논의

□ **현행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문제 중 하나는 사각지대 문제임**

○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를 활용한 보건사회연구원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기준중위소득 30% 이하 소득보장제도 사각지대 규모는 26.3%(2018년 기준)로, 추계인구 기준으로 보면 약 40만 명 정도로 추정됨

- 기준중위소득 30~40% 중에는 15.9%, 40~50% 중 22.6%, 50~60% 중 29.3% 등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에서 인구의 20% 정도가 사회보장 제도 사각지대에 놓여있음
- 기준중위소득 60~75% 중에서는 38.2%가, 기준중위소득 75~100% 이하에서는 절반 정도인 53.4%가 소득보장제도의 지원을 받고 있지 않았음
-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를 기준으로 보면 약 790만 명이 소득보장의 혜택을 받고 있지 못한 것으로 분석
- 전체 4년 중 한 번 이상 소득보장 사각지대를 경험한 대상은 약 383만 명으로 추정. 국민(인구 5,000만 기준)의 7~8%가 소득보장의 위기에 놓여있음[3)]

○ **이러한 사각지대의 문제는 대체로 부양의무자 제도 및 소득/재산 기준으로 인한 것임**

- 특히 직계혈족 등이 일정 소득이 있으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없는 부양의무자 제도의 문제가 큼
- 2017년 이른바 '송파 세 모녀 사건' 이후로 부양의무자 제도는 단계적으로 완화되어 2021년 생계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고,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현재 부양의무자 제도는 의료급여에만 남아 있음[4)]
- 앞서 언급하였듯이 부양의무자 제도의 단계적 폐지로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수급자가 60만 4,000가구, 수급자는 77만 8,000명 증가하였고, 총수급자도 165만 가구 236만 명에 이르게 되었음(2007년 수급자 103만 가구, 158만 명)
- 새 정부는 현재 30%인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35%를 목표로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것을 새로운 국정과제로 제시하였음
- 한편 부양의무자 제도의 완전 폐지는 대통령선거 당시 안철수 후보에 주요 선거공약 중 하나였으나, 현재는 공식적으로 언급되지 않고 있음
- 의료급여에 대한 부양의무자 제도 폐지는 재정 문제(2020년 기초생활보장제도 관련 예산 13조 6천억 원 중 9조 원가량이 의료급여 비용)로 인해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 전면 폐지하면 연간 최소 3조 원에서 5조 원의 예산이 더 필요할 것으로 추정됨[5)]

○ **지나치게 엄격한 소득 기준의 문제도 있음**

- 정부는 이에 대해 기준중위소득을 맞춤형 급여 시행(2015년 7월) 이후 최대치인 5.02% 인상(4인 가구 기준)하였고, 생계급여 최대 급여액도 5~6% 인상하였음

○ **재산 기준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자동차의 소득환산 문제임**

- 현재 기초보장제도에서의 재산: 일반재산, 주거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 자동차의 소득환산율은 100%로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재산 항목은 자동차와 주거임. 자동차의 환산율이 모든 종류의 재산 중에서 가장 높게 설정되어 있음
- 자동차의 경우 1999년 기초생활보장제도 도입 시 국민 정서를 반영하여 100% 환산율을 적용하였으나, 전문가들은 자동차가 이제는 사치재가 아닌 필수재로 인식됨에 따라 자동차에 대한 소득 환산율 조정 등을 제안하고 있음
- 해외에서도 미국은 수급자가 현재 이용하는 차량은 수급자 판정에서 제외하는 경우가 많고, 독일은 차 가격 7,500유로~1만 유로 선에서 보유를 인정. 스웨덴, 일본은 원칙적으로 보유를 인정하지 않으나 출근, 자녀의 등교, 통원 여부, 거주지(산간벽지, 오지)에 따라 유연하게 규정을 적용하고 있음

○ **종합하면 현재 자동차에 관한 제반 상황이 과거에 비해 변화하였으므로 현재와 같이 높은 수준의 자산환산율을 적용하는 것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환산율을

3) 보건사회연구원 보도자료, 「소득보장제도 사각지대 규모는 40만 명 …기준중위소득 30% 이하 인구의 26.3%에 달해」, 2021.5.31.
4) 의료급여도 부양의무자 가구에 노인(기초연금 수급자)이 포함되어 있으면 적용하지 않음.
5) 연합뉴스, 「대선공약에 등장한 '부양의무자 폐지'…언제 실현될까」, 2022.1.6.

일반재산 혹은 주거용 재산 등과 유사하게 낮추거나, 일정 수준 이상의 고가 차량을 보유하는 경우만 제외하고는 재산에 포함하지 않는 방안 등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

- 다만 한국은 미국과 달리 대중교통체계가 잘 발달해 있고, 탄소 배출량 감소가 중요한 상황에서 자동차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신중해야 할 필요도 있음[6)]
- 탄소 배출량이 낮은 친환경 자동차의 경우 기준을 완화하거나, 농어촌지역, 영업에 자동차가 필요한 직군 등에만 제한적으로 기준을 완화하는 것도 한 방법임
- 새 정부의 국정과제에서 자산 기준을 완화한다는 내용을 제시하였으므로 앞으로 구체적인 제도 개선 과정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2) 기초연금 수급으로 인한 감액 문제 해결방안 논의

□ **현재 기초생활보장제도 하에서 기초연금액은 이전소득으로 소득인정액에 포함되고 있음**(「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5조)

○ 기초생활보장제도는 국민이 최저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이에 미달하는 부분을 보충적으로 지원하여 최저생활 유지가 가능하게 하는 제도임

○ 이러한 보충 급여의 원칙, 보충성의 원리에 따라서 기초연금액은 수급자의 가구 소득에 포함하는 것이 기본 원칙이며, 따라서 기초연금을 받으면, 가구 소득인정액이 올라가 기초연금 액수만큼 생계급여 지원액이 깎이게 됨[7)]

○ 제도를 이렇게 설계하게 된 것은,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최후의 사회안전망으로서 보충성의 원리에 따라서 운영되기 때문이기도 하며,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간의 소득 역전 현상을 막기 위한 측면도 있음

□ **기초생활수급 노인이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는 문제에 대해 정부, 전문가, 시민단체 등에서 다양한 대안이 제시되고 있음**

○ 시민단체 등에서 제시하고 있는 대안은 「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을 고쳐서 기초생활보장 수급 노인이 받는 기초연금을 생계급여 산정 시 반영하는 소득인정액에서 제외하는 것임. 기초연금에 대해 보충성의 원리를 유연하게 적용할 것을 요구하는 것임

- 현재도 일부 제도는 소득 계산에 포함하지 않고 생계급여와 별도로 지급하고 있음[8)]
- 일부 시민단체[9)]는 소득인정액 계산 때 기초연금 전액을 빼기 어렵다면, 일정 비율(30%)만이라도 공제해 기초연금을 일부라도 더 받을 수 있도록 하자고 주장하고 있음

---

6) 국회입법조사처, 「2022 국정감사 이슈 분석 제9권, 보건복지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
7) 영국, 일본, 스웨덴 등 국외 사례에서도 기초연금 등 여타 복지제도를 우선 적용하고, 기초생활보장제도와 같은 공공부조가 보충적으로 개입하는 것이 일반적 형태임. 보건복지부 「보도 설명자료」, 2021.5.20.
8) 연합뉴스, 「'줬다 뺏는' 기초연금에 우는 저소득노인 50만 명…언제 눈물 씻나」, 2021.10.10.
9) 빈곤노인기초연금보장연대 등. 위의 연합뉴스 기사 참고.

○ 정부 출연 연구원인 보건사회연구원은 기존 제도의 미세 조정과 근본적인 제도의 재구축에 이르기까지 몇 가지 대안을 제시하고 있음[10)]

- 첫 번째는 특정 기준을 만족하는 노인들에 대해 기초연금의 일부분을 소득인정액에서 제외하는 방안으로 시민단체에서 제시된 안과 유사함
- 두 번째는 노인가구에 대한 공공부조 급여 기준선을 상향시키는 방안으로 기초연금이 아닌 기초생활보장제도 선정기준을 높여서 급여 지급액을 증가시키는 방법임. 다만, 이러한 방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노인에 대한 빈곤선이 비노인에 비해 높아야 하는지에 대한 객관적 증거가 필요함
- 그 외에는 기초연금을 수당화하여 모든 노인에게 자산조사 없이 보편적으로 지급하는 제도로 전환하는 방안과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노인 부분을 분리한 다음 기초연금과 통합하여 노인을 위한 별도의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만드는 방안이 있음

3)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및 민간역량 활용

□ **정부가 보유한 행정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복지수요자가 본인들이 받을 수 있는 복지혜택에 대해 온라인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및 지자체 단위에서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운영 필요**

○ 사회보장정보원이 보유한 행정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효과적인 모델을 구축, 개선하고 지방정부와 연계해야 함. 이러한 과정에 관한 연구 및 개선작업은 현재 사회보장정보원 차원에서 진행 중임[11)]

○ 사회보장정보원이 보유한 데이터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복지 관련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수요자 맞춤형으로 제공하고, 이들이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쉽게 신청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 현재는 사회보장정보원이 운영하는 '복지로'(https://www.bokjiro.go.kr) 가 있음
- '복지로' 서비스에 대한 사회보장정보원의 분석[12)]에 따르면 이용 편의성이 떨어지는 점, 이용자가 복지서비스를 직접 탐색해야 한다는 점, 정교하지 않은 결과 제공으로 맞춤형 안내에 대한 국민의 체감도가 낮다는 점, 온라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는 복지사업과 관련 정보가 제한적이어서 비대면 서비스 수요 증가에 대응하고 있지 못하다는 점 등이 복지로 시스템의 문제로 지적되고 있음. 여전히 방문 신청이 온라인 신청보다 많아 온라인 서비스를 수급자들이 잘 모르는 것도 문제임
  - 정보 취약계층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이용 편의성을 개선하고, 맞춤형 안내 서비스의 질을 높일 필요가 있음. 한편 대부분의 복지서비스를 복지로를 통해

10) 보건사회연구원, 「공적 노후소득보장체계 현황 및 개선방안」,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출 보고서, 2017.
11) 이우식 외 5인, 「복지사각지대 발굴체계 재정립 연구」, 사회보장정보원, 2022.
12) 배유진 외 3인, 「복지로 접속데이터 기반 콘텐츠와 서비스 바굴 및 개선방안」, 사회보장정보원, 2022.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복지로를 복지서비스에 대한 통합적인 온라인 플랫폼으로 만들어가야 함

○ 서울시의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과 같이 지자체 단위에서 빈곤 위기가정을 직접 방문하고 관련된 복지서비스를 안내하는 사업도 필요함[13)]

- 특히 고령층을 비롯한 취약계층 중에는 온라인 서비스가 익숙하지 않은 분들도 많아 이러한 찾아가는 서비스가 온라인 서비스의 단점을 보완해줄 수 있음

□ 시행 1년을 맞은 국세청의 '실시간 소득 파악'(RTI, Real Time Information) 제도를 활용하여 전 국민의 소득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대응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 있음

○ 실시간 소득 파악 제도는 문재인 정부 시절 '전 국민 고용보험' 제도 도입을 위해 시작된 제도로, 소득 파악이 어려운 비정형 근로자(일용근로자, 아르바이트, 방문판매원, 퀵서비스 기사, 대리운전기사 등)의 소득을 파악하고 고용보험 제도 내로 포용하기 위하여 시작되었음

- 국세청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매월 평균 85만 명의 사업자가 고용상태가 일정치 않은 건설 현장 일용근로자, 아르바이트, 방문판매원 등 비정형 근로자 670만 명의 소득자료를 꾸준히 제출하는 등 제도가 조기 정착되었다고 평가됨[14)]
  - 일용근로자 약 300만 명(건설 현장 근로자 등 3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어 있지 않은 자), 인적용역 사업자 약 370만 명(방문판매원·대리운전기사·캐디 등 물적 시설 없이 용역을 제공하는 자)

○ 이렇게 수집된 자료는 1차 적으로 이들의 고용보험 가입 지원에 활용되나, 국세청은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보건복지부 등 다른 복지행정 기관에도 사회보험 가입 지원, 사회보장급여 자격 심사 등을 위해 소득자료를 제공하고 있음

○ 실시간 소득 파악 제도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한 공공부조제도의 사각지대를 개선하는 데에도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앞으로 이 시스템을 발전시킬 필요 있음

□ 사회복지 공무원이 사각지대에 놓은 사람을 모두 찾아가며 찾는다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에 민간의 역량을 활용할 필요도 있음

○ 한국사회복지협의회는 지역사회 차원에서 소외된 이웃을 찾고 지원하는 봉사단을 조직하여 현재 전국 117개 지역에서 활동 중임. 민, 관 협력을 통한 복지 소외계층 상시 발굴시스템으로 작동 중임[15)]

○ 읍·면·동 지역에서 사각지대 발굴을 담당하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이 역할을 할 수

13) 복지망을 더 촘촘하게...찾아가는 동주민센터 1년, https://mediahub.seoul.go.kr/archives/1008412
14) 국세청, 「실시간 소득파악」(RTI) 시행 1년, 복지세정의 한 축으로」, 2022.9.20.
15)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좋은 이웃들 소개 페이지. https://bokji.net/ssn/bin/13.bokji

있도록 협의체에의 지원 및 협의체 위원의 역량 강화도 필요함. 특히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사각지대 발굴 성과를 높이려면 위원들의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교육적 지원이 중요하다는 연구[16]가 있어, 이 부분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해야 함

4. 미래 소득보장제도로의 전환: 기본소득과 안심소득[17]

□ **최근 정치권과 학계를 중심으로 미래 소득보장제도에 관한 논의가 활발함. 이러한 논의는 사회변화로 새롭게 등장한 사회적 위험에 기존 복지국가가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인식에서 시작**

○ 긱경제(gig economy)의 발달과 플랫폼 노동 등 불안정한 일자리의 확대, 근로 빈곤 증가 등의 문제에 사회보험을 중심으로 한 기존의 복지제도가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임

- 이러한 인식 속에서, 새로운 소득보장제도 모델이 제시되고 있다. 경기도에서 촉발된 기본소득(Basic Income)을 둘러싼 논쟁은 한국에서 미래 소득보장제도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는 계기가 되었음
- 최근에는 보수 정치권과 학계를 중심으로 음의소득세(Negative Income Tax) 개념을 활용한 안심 소득이라는 대안을 새롭게 제시하였음
- 한편 현재 복지국가의 단점을 보완하여(실시간 소득 파악 제도를 활용한 전 국민 고용보험) 개선하는 것이 현 상황에서 최선의 대안이라는 주장 역시 존재함

○ 기본소득, 안심소득 등 미래 소득보장제도는 현 상황에서 직접 도입 논의를 할 대상이라기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효과에 대해 논의가 필요한 제도들임

○ 기본소득은 정부가 아무런 조건 없이 모든 국민에게 일정한 금액의 현금을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제도로, 가구가 아닌 개인을 대상으로, 소득이나 자산 보유에 상관없이, 바우처나 현물이 아닌 '충분한' 금액의 현금을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것이 핵심

○ 음의소득세(NIT)는 소득수준이 기준점보다 낮은 가구에는 보조금을 지급하고, 높은 가구에는 세금을 걷는 제도로, 안심소득은 음의소득세 제도를 응용하여 만든 제도임

- 2022년 7월부터 서울시에서 안심소득 실험이 진행 중임. 실험 대상 가구에 대해 기준소득액과 가구 소득 간 차액의 50%를 급여로 지급하는데, 쉽게 말해 중위소득 50~85% 이하 가구에 대해, 중위소득의 85%에서 부족한 소득의 50%를 차등적으로 지원하는 것임
- 기본소득과 안심소득은 공유하는 부분도 많은 제도이지만, 효과나 소요 재원 등에서는 상당한 차이도 있음

---

16) 정아원 외 3인, 「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의 복지사각지대 발굴 경험에 대한 영향요인 : P시를 중심으로」, 『지방행정연구』, 제34권 제2호, 2020.

17) 해당 부분은 윤성원, 「미래 소득보장제도 비교 분석:기본소득과 안심소득(음의소득세)」, 국회입법조사처 이슈와 논점, 2022를 요약하였음.

○ 기존 복지제도에 비해 제도가 훨씬 단순하여 사각지대나 발생 가능성이 적다는 공통점이 있음

○ 제도설계 측면에서 둘의 가장 큰 차이는 기본소득은 개인 대상이지만 음의소득세는 가구 대상이라는 것임

○ 근로의욕에 대한 영향, 소득 불평등 완화 효과 등에 대해서는 논쟁적인 부분이 있음

- 핀란드의 기본소득 실험에서 기본소득의 근로의욕에의 효과는 명확하지 않았음
- 기본소득 혹은 안심소득의 소득격차 완화 효과가 크다는 연구도 있으며, 재정지출 규모의 제약이 있으면 안심소득과 유사한 최저소득보장제의 효과가 크고, 없다면 기본소득의 효과가 크다는 연구도 있음.[18] 예산제약 하에서는 안심소득이나 현 복지제도의 효과가 큰 것으로 추측되나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함

○ 대규모 재원이 투입되는 사업인 만큼 거시경제에의 효과도 중요함. 기본소득 도입이 총생산, 총자본, 총노동을 감소하고 사회 전체의 후생 수준을 악화시킨다는 논문이 2021년 발간되었음[19]

- 안심소득에 대해서도 유사한 주장이 있으며, 다만 이 경우 그 부정적 효과가 기본소득이나 현 복지제도에 비해 적다고 주장

□ **국민은 기본적으로 기본소득과 같은 새로운 사회보장제도 도입에 찬성하나, 증세가 동반되면 반대가 찬성을 앞서게 되고, 세금은 자신이 아닌 부자와 기업이 내길 바라는 경향이 있음[20]**

□ **기본적으로 현 복지제도를 최대한 개선하는 것을 단기적인 목표로 하되, 장기적인 사회변동에 대응하기 위해 새로운 소득보장제도에 대해서도 논의가 필요함**

○ 이념에 매몰되기보다는 '증거 기반 정책(Evidence Based Policy) 결정'이라는 관점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정책 효과에 대해 비교, 분석하는 것이 중요함. 그런 점에서 안심소득에 대한 정책실험 시도는 의미 있는 출발임

---

18) 박기성, 조경엽, 「안심소득제의 비용과 경제적 효과」, 한국경제연구원, 2021.
최한수, 「각국의 기본소득 실험과 정책적 시사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7.

19) 한종석, 김선빈, 장용성, 「기본소득 도입의 경제적 효과 분석」, 『한국경제의 분석』, 27권 1호, 2021.

20) 양재진, 윤성원, 장우윤, 「한국인의 복지 및 기본소득 관련 증세 태도 연구」, 『예산정책연구』, 제10권 제2호, 2021.

참고문헌

국세청, 「실시간 소득파악」(RTI) 시행 1년, 복지세정의 한 축으로」, 2022.9.20.

국회입법조사처, 「2022 국정감사 이슈 분석 제9권, 보건복지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

박기성, 조경엽, 「안심소득제의 비용과 경제적 효과」, 한국경제연구원, 2021.

배유진 외 3인, 「복지로 접속데이터 기반 콘텐츠와 서비스 발굴 및 개선방안」, 사회보장정보원, 2022.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제출자료」, 2022.8.28.

보건복지부, 「4년간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빈곤 사각지대 있던 77만 8,000명 신규 혜택」, 보도설명자료, 2022.1.27.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는 기초생활 수급 노인 40만 명은 사실상 기초연금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보도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보도설명자료, 2021.05.20.

보건복지부, 보건사회연구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접근성 강화 방안 연구」, 2021.

보건복지부, 「2022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안내」, 2022.1.1.

보건사회연구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재산의 소득환산제 개선방안 연구」, 2011.

보건사회연구원, 「OECD 주요국의 공공부조제도 발전과정과 최근 주요 이슈」, 2013.

보건사회연구원, 「각국 공공부조제도 비교연구 : 일본편」, 2014.

보건사회연구원, 「각국 공공부조제도 비교연구: 미국편」, 2015.

보건사회연구원, 「각국 공공부조제도 비교연구 : 스웨덴편」, 2015.

보건사회연구원, 「공적 노후소득보장체계 현황 및 개선방안」,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출 보고서』,2017.

보건사회연구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재산기준 개선방안 연구」, 2018.

보건사회연구원, 「우리나라 소득분배 진단과 사회보장 재구조화 방안」, 2020.

보건사회연구원, 「소득보장제도 사각지대 규모는 40만 명 …기준중위소득 30% 이하 인구의 26.3%에 달해」, 보도자료, 2021.5.31.

서울특별시, 「기초보장제도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2022.1.19.
https://news.seoul.go.kr/welfare/archives/50031

서울특별시, 「복지망을 더 촘촘하게...찾아가는 동주민센터 1년」, 2016.7.18.
https://mediahub.seoul.go.kr/archives/1008412

양재진, 윤성원, 장우윤, 「한국인의 복지 및 기본소득 관련 증세 태도 연구」, 『예산정책연구』, 제10권 제2호, 2021.

연합뉴스, 「'줬다 뺏는' 기초연금에 우는 저소득노인 50만 명…언제 눈물 씻나」, 2021.10.10.

연합뉴스, 「'대선공약에 등장한 '부양의무자 폐지'…언제 실현될까」, 2022.1.6.

윤성원, 「미래 소득보장제도 비교 분석:기본소득과 안심소득(음의소득세)」, 국회입법조사처 이슈와 논점, 2022.

이우식 외 5인, 「복지사각지대 발굴체계 재정립 연구」, 사회보장정보원, 2022.

정아원 외 3인,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의 복지사각지대 발굴 경험에 대한 영향요인 : P시를 중심으로」, 『지방행정연구』, 제34권 제2호, 2020.

최한수, 「각국의 기본소득 실험과 정책적 시사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7.

한종석, 김선빈, 장용성, 「기본소득 도입의 경제적 효과 분석」, 『한국경제의 분석』, 27권 1호, 2021.

[토 론 문]

이 정 은 권익옹호부장
한국사회복지행정연구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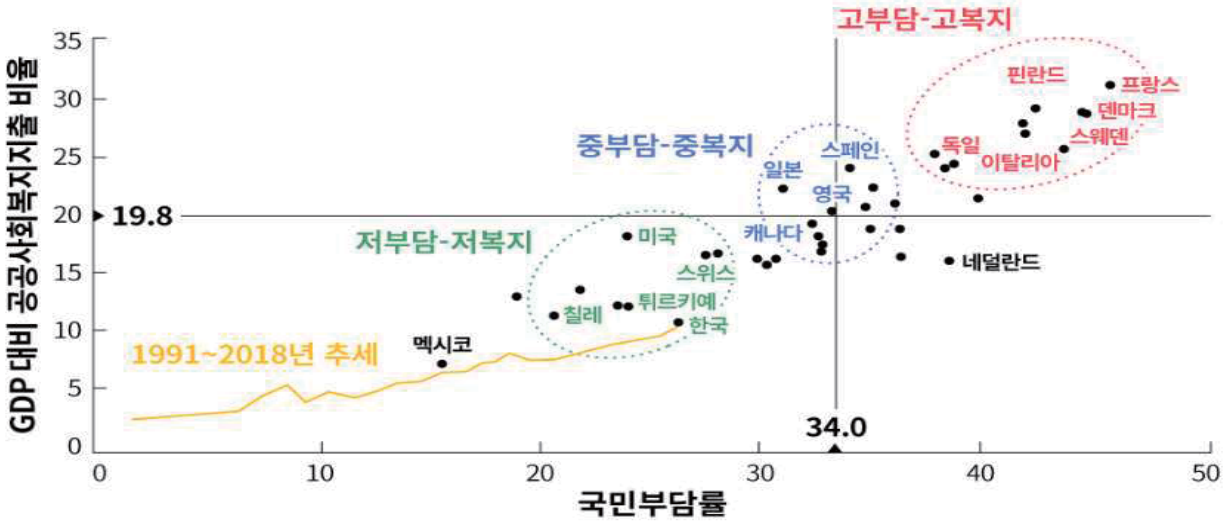
Ⅰ. 탈산업사회 속 소득보장제도는 국민에 대한 국가의 소명

탈산업사회로 전환되면서 일자리가 감소하고 저성장, 임금격차에 따른 양극화의 심화 등에 따라 더 이상 기존의 소득보장제도만으로는 국민 삶의 질을 담보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이런 사회에서 일할 의지가 있어도 또는 일을 해도 빈곤한 삶을 사는 국민들의 삶을 보장해는 주는 것은 국가의 필연적 소명이다.

저성장이 장기화되고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각종 신 경제적 위험 속에 저소득층의 삶은 어려울 수밖에 없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는 기존 사회안전망으로는 대처가 어렵다. 이 와중에 아직도 2014 송파 세모녀의 또 다른 사건들이 발생하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한 사회보장급여법의 도입, 공공부조의 변혁, 공공 빅데이터를 활용한 위기가구 사전발굴 시스템의 구축 등 수많은 노력이 있어왔으나 최근 수원 세모녀 사건까지 비슷한 일들은 매년 반복되고 있다. 전면적인 시스템과 제도의 개편이 다시 한번 요구되고 있는 게 현실이다. 획기적이고 참신한 소득보장제도의 변혁이 이뤄지면 과연 복지사각지대는 사라질 수 있을까?

한국은 대표적인 저부담·저복지 국가다. 저복지 국가에서의 저소득층 삶은 팍팍하다. OECD 주요국의 공공사회복지지출 현황 보고서[1]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공공사회복지지출은 GDP 대비 10.8%로 38개국 중 35위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복지지출의 증가속도는 어느 나라보다 빠르다. 우리나라의 1990년 대비 2019년 복지지출 비중은 4.1배 증가했는데, 이는 OECD 회원국 중 1위다. 일본(2.1배), 미국(1.42배), 프랑스(1.27배), 독일(1.21배) 등 선진국에 비해 한참 높다. OECD 평균은 1.21배다. 또한 사회보장세 등 없이 저부담으로 세계에서 5대 보험을 운용하는 손꼽히는 나라이기도 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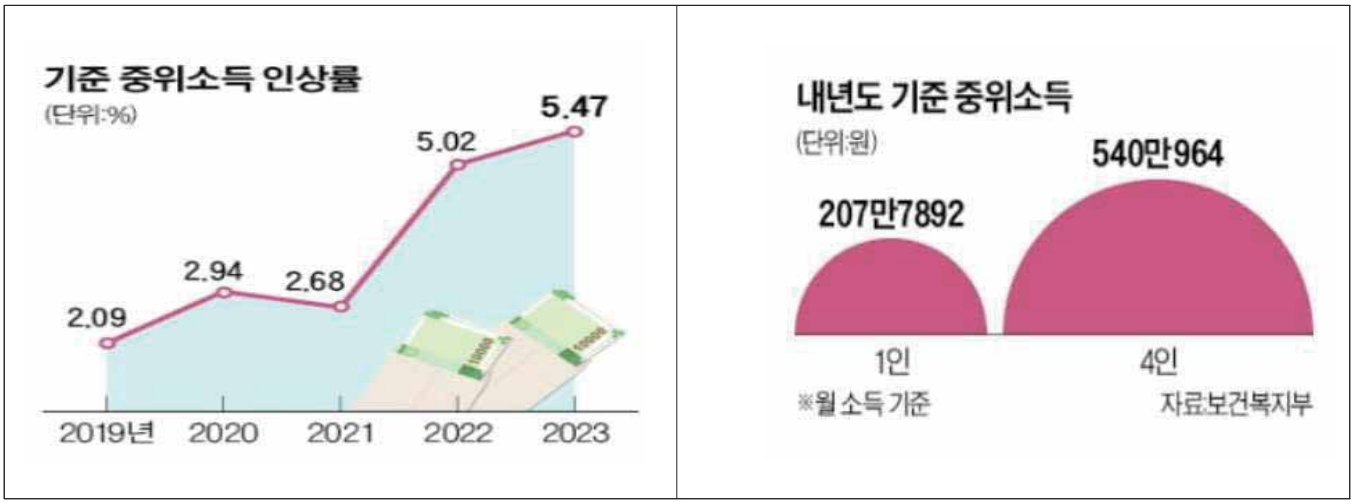
그림1. GDP 대비 공공사회복지지출 비율과 국민부담률 (2018년, 단위:%)



1) 국회예산정책처 발간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표적인 공공부조제도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발제자의 말대로 여러 한계를 보인다. 지금은 의료급여를 제외한 생계, 주거급여 등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가 되었으나 여전히 존재하는 부양의무자 관련 사각지대의 발생, 선별제도에 따른 소득환산율 문제, 근로유인이 낮아 자립, 자활이 어렵다. 노인빈곤률 1위임에도 불구하고 낮은 기초연금 소득과 보충성 원리에 따른 생계급여에 기초연금 소득 반영되어 오히려 차상위 이상의 계층과의 형평성 문제 등 실제 현장에서도 많은 사각지대와 비수급 빈곤층에 대한 어려움의 실체를 정면으로 마주하고 있다. 실제 올해 발생한 창신동 모자사건은 각종 체납과 실생활이 곤궁하였음에도 낡은 주택의 공시지가 때문에 소득환산율이 적용되어 수급에서 탈락된 전형적인 사례다.

Ⅱ. 빈곤정책, 제도변화 속에 숨겨진 전달체계의 단면



▌한경일보(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22072941551)

선정과정의 과학화, 제도 간 형평 등 현재도 좀 더 나은 대안을 위한 각 계의 노력과 논의는 활발하다. 정부는 내년 중위소득 기준을 역대 최대인 5.47%로 높였다. 이에 따른 재정추계는 생계급여 대상은 약 9천1백명, 예산은 6천억원 소요될 것을 예상하고 있다. 주거급여도 중위소득 47%로 상향, 이에 따라 약 14만명의 보장대상자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사회보장제도의 확대는 반드시 예산을 수반한다. 기초연금이 보충성 원리에 의해 생계급여의 소득으로 반영되는 것이 철회되지 않는 것, 차량 기준을 사치재로 인식하여 재산의 소득환산율이 타 재산에 비해 엄격한 이유도, 의료급여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아직 포기하지 못하는 이유도 모두 그에 있다. 선별제도에 따른 각종 행정비용 감소 및 일을 하면서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기본소득 및 안심소득(음의 소득세) 도입은 또 다른 혁신적인 소득보장제도처럼 보인다. 제도적인 정비가 선행된다고 하더라도 사회복지정책은 일반행정과 달리 휴먼서비스에 기반한다는 점을 간과하면 안된다. 전달체계인 복지공무원의 직무수행 역량에 따라 사회보장정책의 성패가 달려있다. 이 성패는 사회적 약자의 생존권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그러나 실제 사회보장제도의 전달체계와 인력에 대한 논의는 없는 편이다.

□ 찾을 수 없는 복지팀 - 조직구조 및 인력배치 문제

실제로 2014년 송파세모녀 사건을 계기로 공공 전달체계의 효율적 구축을 위해 읍면동 복지허브화가 추진되어 2022.5월 현재 전국 96% 읍면동에 찾아가는 보건복지팀이 설치 운영되었고, 이를 수행하기 위한 보건복지 인력 1만 5천여명이 단계별로 확충되었다. 읍면동에 복지행정팀과 통합사례관리, 주민참여형 서비스제공기반의 마련 등 좀 더 사회복지 전문성을 강화시킨 「찾아가는 보건복지팀」을 신설하였으나 실질적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 조직운영과 인력배치는 지자체 장의 고유권한이므로 강제할 수 없다며, 실제 찾아가는 복지팀만 형식적으로 만들어 놓고 찾아가는 수행인력을 타 부서에 전환배치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실제 찾아가는 업무를 위해 충원된 행정직 등 기타 직렬은 복지직이 배치될 때마다 타 부서로 전환되고 있으며, 읍면동에 배치되어야 할 간호직은 코로나19로 보건소에 배치되거나 보건소의 하부행정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 찾아 갈 수 없는 복지공무원 - 인력의 문제

종합상담과 서비스 신청과 접수 등 안내 등에 집중되어 있는 복지행정팀과 달리, 찾아가는 보건복지팀은 방문형 서비스 연계와 통합사례관리, 자원관리 등 좀 더 복지전문성과 복지현장의 경험노하우가 응축된 인력조직이 필요한 특성이 있다. 그러나 찾아가는 복지팀장 마저도 복지업무와 전혀 관계없는 세무직, 전산직 등이 팀장으로 배치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즉, 현장은 복지 전문 자격증이 없는 비전문가의 지도와 감독 하에 자격증을 가진 전문 인력이 운영되고 있다. 전문가가 현장에서 전문가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으며, 전문성을 펼칠 수 없는 환경에 놓인 것이다. 슈퍼비전 체계도 없다.

여기에 2018~2020년 3년간 사회보장 신설·변경 협의제도는 중앙부처 148건, 경기도는 455건으로 최근 보편복지 실현에 따라 각종 중앙부처의 업무 외 지자체의 복지업무가 신설되어 이를 수행하는 인력은 오롯히 사회복지직이 떠맡게 되는 깔때기 현상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 코로나19 이후에는 각종 코로나 관련 대민업무를 하느라 복지 본연의 업무를 할 수 없고, 이에 따른 소진 및 각종 업무과다를 호소하고 있다. 각종 제도 완화와 더불어 관리해야 할 복지대상자의 수도 폭증했다.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가 시작된 2017년에 비해 수급가구는 53.6%(848,004명) 증가, 팬데믹 이후인 2000년 이후 긴급지원은 93% 증가되었다. 1인당 맡아야 하는 업무에 대한 적정성 평가도 없다.‘지원’이란 단어만 붙으면 모두 복지팀으로 업무분장이 되는 것이 현실이다.

○ 최근 5년간 기초생활보장수급자 현황

(단위 : 명)

구분		2017.12	2018.12	2019.12	2020.12	2021.12	2022.8
수급자 수(명)*		1,581,646	1,743,690	1,881,357	2,134,186	2,359,672	2,429,650
	생계	1,234,559	1,229,067	1,232,325	1,301,061	1,485,635	1,549,345
	의료	1,390,944	1,395,056	1,397,631	1,440,298	1,443,325	1,436,165
	주거	1,351,427	1,529,726	1,681,041	1,947,099	2,163,011	2,238,114
	교육	335,004	309,729	292,773	303,747	310,840	302,695

* 전체(중복제거)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순서, 시설수급자 포함

□ 찾아도 줄 수 없는 복지서비스 - 복지자원의 한계

공적자원은 주로 소득 및 재산기준으로 정해진다. 즉, 대상자를 발굴해도 소득과 재산기준을 넘긴 대상자는 도움을 줄 수 없으며, 있어도 민간자원과 한시적 자원에 국한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복지자원을 관리하고 효율적 운용방안을 마련하도록 되어 있으나, 체계화된 매뉴얼이 부재한 상황에서 소득과 재산 기준 이상의 대상에 대한 판단은 오롯이 담당자의 책임이 되는 것 또한 문제다. 지원방안에 조건이 붙어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업무에 임하기 힘들고, 설사 지원책을 마련한다 하더라도 감사와 민원의 타깃이 될 뿐이다. 결국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어려움에 처하는 구조가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력이나 구조적 조직문제 등 각종 문제가 얽혀 발생한 사건이 담당 공무원의 책임이 되어버리는 것이 현실이다.

Ⅲ. 공공 전달체계의 기능회복이 무엇보다 중요

사회복지 정책의 최일선에 있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의 복지팀이 그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게 먼저 구조화하는 것이 우선이다. 현재처럼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전문조직으로서 인정받지 못하고, 업무과다와 관료주의적 폐쇄적 속성 내에서 복지영역에 대한 전문적 인지와 지식 없이 형식적 업무관행을 따르게 한다면 결국 그 폐해는 사회적 약자에게 갈 수밖에 없다.

따라서 먼저 첫째, 공공복지행정체계가 확립되기 위해 전국 지자체별 찾아가는 보건복지팀에 대한 운영실태 일제조사 및 복지행정분야와 사회복지 전문분야를 구분하여 인력을 운용하고, 관리하는 체계적인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 또한 일제조사로 변칙과 꼼수로 운영중인 지자체에 각종 인센티브 배제, 지자체장의 재교육 등으로 모니터링하며 강제하는 방안도 필요하다. 둘째, 사회복지전담공무원들이 고유의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체계화된 슈퍼비전 체계

마련 및 매뉴얼 도입 등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며, 한국 공공 전달체계의 고질병인 '업무깔때기' 현상을 해결해주는 것이다. 실제 일선에서 관련 공무원들이 느끼는 업무에 대한 어려움으로는 업무과다(3.75), 대상자 관련 시간 할애 어려움(3.74), 슈퍼비전 기회부족(3.53) 등으로 업무량과 대상자 중심 행정구현을 못하고 있어서의 업무에서 어려움을 느끼고 있어 진정한 의미의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이 제대로 구현되고 있지 못함을 알 수 있다(박경숙, 2013). 셋째, 공적지원만으로 해결이 어려운 대상가구의 발굴 시 생활실태 및 상황에 따른 유연한 판단기준과 사회복지직 전담공무원의 재량권 등 확대를 인정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Ⅳ. 제언

조직구조의 정상화는 효율적 인력관리로 이어질 것이며, 잘 교육된 인력은 복지서비스의 체감도와 서비스의 질 향상으로 보답할 것이며 이는 곧 책임감 있는 행정으로 귀결될 것이다. 특히 주로 자원이나 예산 부족으로 선별적 급여로 제공되고 있는 공공부조 체계에서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역량에 의해 복지체감도나 서비스와 급여의 효과성, 효율성이 달려있기에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러나 현재 전달체계 개편 관련 사항은 인력증원 등 하드웨어적인 부분만 관심이 있을 뿐 인적자원을 서포트 할 수 있는 팀 구성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소통 등 소프트웨어적인 차원에서의 논의는 없는 상황이다.

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개편은 매우 반세기가 다되어가도록 과도기이다. 사람을 살리고 사회를 살리기 위해 존재하는 복지직 공무원들이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내부에서 문제를 제대로 판단하고 이행하는 것이 문제해결의 첫걸음일 것이다. 그 외에도 공공부문 외 민간단체, 지역주민 등 모두가 살피고 찾아낼 수 있도록 지역돌봄문화의 확산과 인간애의 회복도 중요한 우리 시대의 화두이다. 한 아이를 키우는데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인디언 속담처럼 어려운 이웃을 살피고 찾아내는 데는 온 사회의 역량이 필요하기에 우리 사회가 해결해 나가야 하는 과제이다.

복지사각지대를 예방하고 인간다운 권리를 우리 모든 국민들, 그리고 취약계층들이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혁신적인 제도개선이나 신설이 아니라 현재 기능하고 있는 제도와 전달체계 기능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처방이다. 모든 제도와 정책이 사람을 위해 있듯 제도와 정책을 이어주는 사람에 대해 잊지 않아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국회예산정책처 "OECD 주요국의 공공사회복지지출 현황 보고서" (2018)

박경숙(2013) "공공복지 전달체계 현안과 개선방안" [보건복지부 발표자료]

선수경(2011)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전문성과 소진에 관한 연구"

[주 제 발 표]

세모녀의 사회복지-현실과 대책

정 재 훈 교수

서울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개 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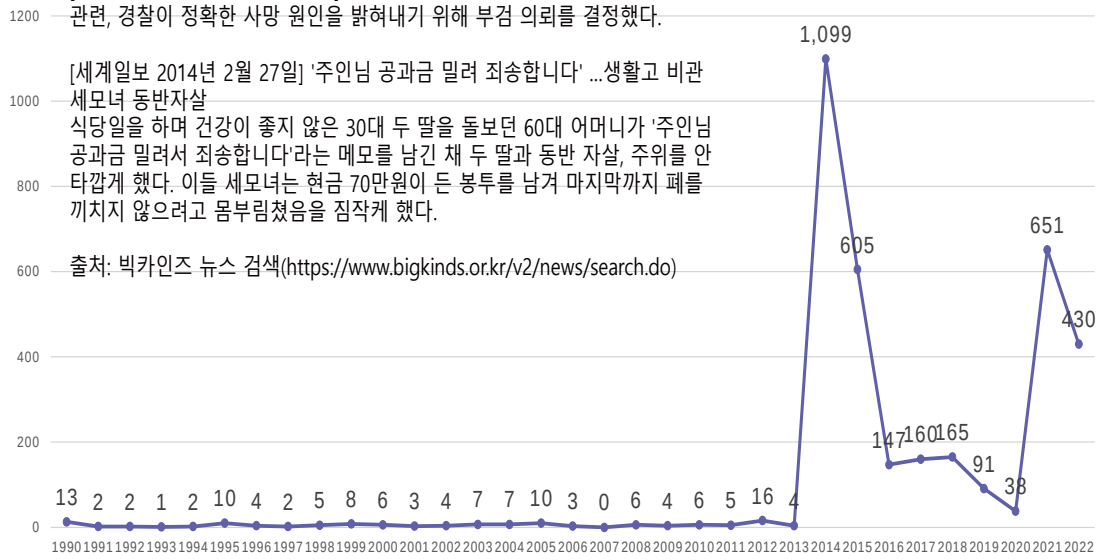
- ‘세모녀’ – 복지사각지대의 대명사
- ‘세모녀의 사회복지’ - 복지사각지대 대응 정책 과정
- 수원 세모녀 사건과 새로운 정책과제
- 마무리

사회이슈로서 '세모녀'의 등장

[충청일보 2014년 2월 11일 3면] 속보=충북 청주의 **세모녀** 동반 자살 사건과 관련, 경찰이 정확한 사망 원인을 밝혀내기 위해 부검 의뢰를 결정했다.

[세계일보 2014년 2월 27일] '주인님 공과금 밀려 죄송합니다' …생활고 비관 세모녀 동반자살
식당일을 하며 건강이 좋지 않은 30대 두 딸을 돌보던 60대 어머니가 '주인님 공과금 밀려서 죄송합니다'라는 메모를 남긴 채 두 딸과 동반 자살, 주위를 안타깝게 했다. 이들 세모녀는 현금 70만원이 든 봉투를 남겨 마지막까지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몸부림쳤음을 짐작케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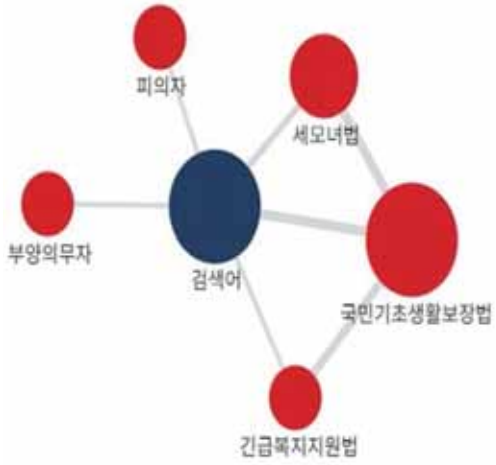
출처: 빅카인즈 뉴스 검색(https://www.bigkinds.or.kr/v2/news/search.do)



출처: 빅카인즈(https://www.bigkinds.or.kr/v2/news/search.do), 1990.1.1 ~ 2022.10.17일까지 기사 기준

세모녀와 관계가 높게 나온 이슈

'세모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긴급복지지원법(+세모녀법),
부양의무자와 가장 높은 관계를 나타내는 개념이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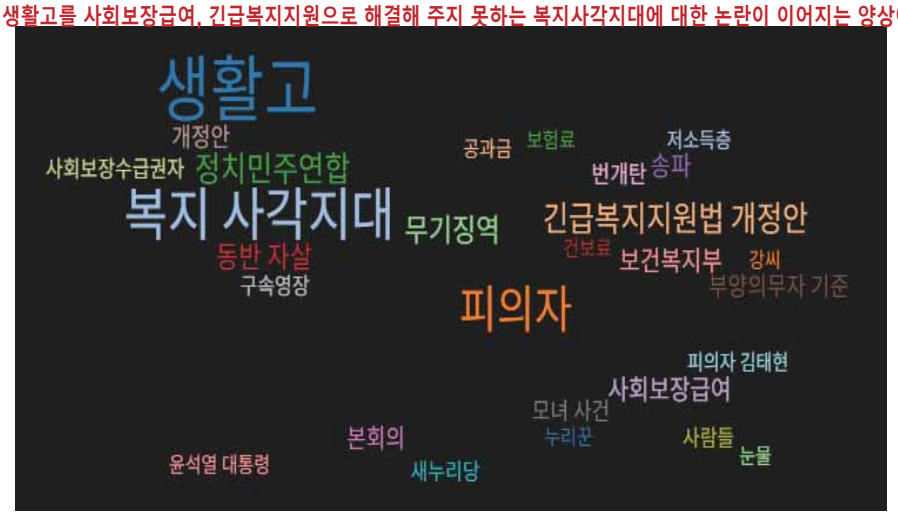


출처: 빅카인즈(https://www.bigkinds.or.kr/v2/news/search.do), 1990.1.1 ~ 2022.10.17일까지 기사. 관계도 가중치(관련기사 건수) 10 기준. 인물, 장소, 기관 제외

세모녀 뉴스가 나올 때 많이 나온 키워드

'세모녀' 뉴스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개념은 생활고, 복지사각지대, 동반자살, 긴급복지지원 개정안, 부양의무자 기준 등이었다.

생활고를 사회보장급여, 긴급복지지원으로 해결해 주지 못하는 복지사각지대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는 양상이다.



출처: 빅카인즈(https://www.bigkinds.or.kr/v2/news/search.do), 1990.1.1 ~ 2022.10.17일까지 기사. 연관어 뉴스 1000개 분석 기준.

복지사각지대

OECD(경제개발협력기구) 회원국 중 자살률이 제일 높은 국가 = 한국. 자살 = 극단적 선택
한국적 자살 유형으로서 가족자살
어려운 가족 vs. 마음대로 해도 되는 가족? vs. 남겨 두었을 때 내 자식들의 운명은?

12 전국

1년새 70여명 '일가족 극단 선택'…구멍 못 메우는 복지망

일가족 사망 1년 새 18건…
대부분 '극심한 생활고' 내몰려
부양의무자 기준 등 엄격해
'복지사각지대'에서 신음
긴급복지지원제도에도 불구하고…

최근 1년 일가족 극단적 선택 사건

2020년		
• 1월5일	경기 김포 일가족 3명	
2019년		
• 12월23일	대구 북구 일가족 4명	
• 11월6일	경기 양주 일가족 4명	
• 11월19일	인천 계양구 일가족 등 4명	
• 11월2일	서울 성북구 네 모녀	
• 10월15일	경남 거제 일가족 4명	
• 10월7일	경기 시흥 일가족 4명	
• 10월1일	제주시 일가족 4명	
• 9월4일	대전 중구 일가족 4명	
• 8월16일	경기 의왕 일가족 4명	
• 6월8일	경기 시흥 일가족 4명	
• 5월20일	경기 의정부 일가족 3명	
• 5월5일	경기 시흥 일가족 4명	
• 3월26일	경기 화성 일가족 4명	
• 3월13일	부산 금정구 일가족 3명	
• 3월6일	충남 공주 일가족 4명	
• 2월25일	전남 여수 일가족 4명	
• 1월24일	서울 강서구 일가족 4명	

기초생활수급대상 등 긴급복지 지원 대상이 아니며…

가족자살의 사회복지학

1. 가부장적 가족관계의 극단적 표현

2. 낮은 수준의 사회보장제도

3.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관계없이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의 부재

빈곤으로 인한 가족자살이 이어졌지만,
2014년 '송파 세 모녀 사건' 이후 '(세)모녀'는
복지사각지대 이슈의 대명사가 되었다.

출처: "… 구멍 못 메우는 복지망", 한겨레신문 2020년 1월 7일 12면.

복지사각지대 해결 수단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긴급복지지원제도

선가정 후사회보장 원칙의 변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긴급복지지원제도를 통해 선가정 후사회보장 원칙의 변화가 시작되었다.

빈곤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변화 + 사회적 이슈로서 빈곤의 등장

송파 세모녀 사건 이전에 이미 시작된 긴급복지지원에 대한 정책적 관심

사각지대 논란

한겨레신문 1999년 9월 10일, 27면.

대구 불로동 사건

-2004년 12월 대구 불로동 5세 남아(선천성 척수성 근위축증) 영양실조 사망 사건

-의료비 부담이 가장 큰 원인

-사건 직후 사회문화장관회의에서 대책 마련에 착수했고

-2005년 1월 13일 대통령 신년기자회견에서 사회안전망 개선 약속...

-2005년 2월 14일 긴

송파 세모녀 사건

-2014년 2월 서울 송파구 일가족 자살 사건

-60세 어머니, 35세 큰딸, 32세 작은딸

-어머니 식당 일, 큰딸 당뇨와 고혈압, 작은딸 신용불량자

-의료비 부담 + 엄마가 다치면서 식당 일 중단

-집세 및 공과금인 70

증평 모녀사건

-2018년 4월

-엄마와 네살배기 딸, 남편의 자살에 이은 엄마의 선택

-모녀 사망 후 5개월 만에 발견

사각지대 발생의 불가피성

세상 어떤 제도에도 사각지대는 존재한다.

국민지원금(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으로서 소득 하위 88% 기준은 적절한가?

기준이 정해지는 순간, 사각지대는 존재할 수 있다.

기준

법, 규정, 지침...

→ 사각지대 → 어떻게 최소화할 것인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기준

정보 부족 신청주의에 따른 급여

알아도... 자존감, 자존심...수치심(사회적 낙인 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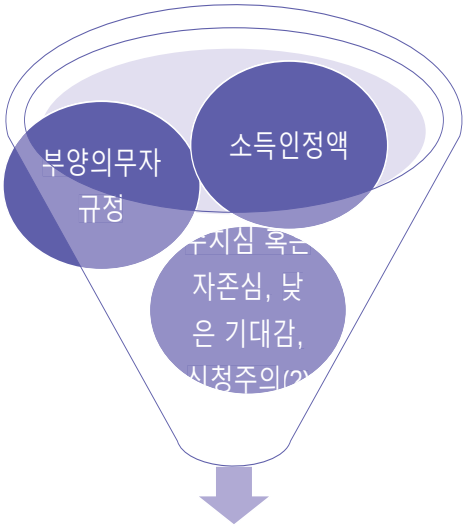
차상위

긴급복지 지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3조(차상위계층) 법 제2조제10호에서 "소득인정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인 계층"이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기초생활급여 수급의 경계선에 있는 사람들)

기초생활수급의 사각지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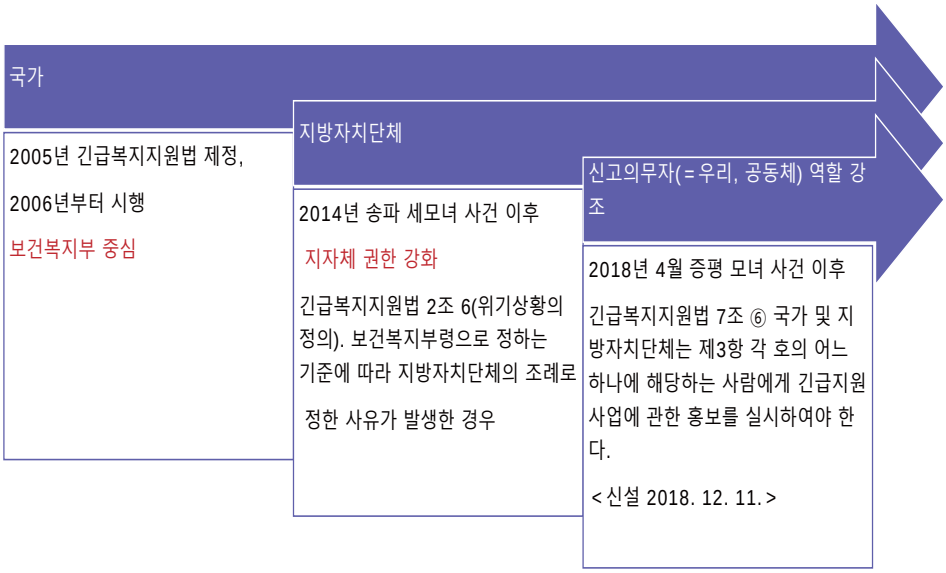
사각지대 발생을 없앨 수 있을까? 부양의무자와 소득인정액 관련 규정의 꾸준한 개선이 필요하다.
신청주의 원칙을 벗어난 대안은 찾기 어렵다.



- ‘세모녀’ – 복지사각지대의 대명사
- **‘세모녀의 사회복지’ - 복지사각지대 대응 정책 과정**
- 수원 세모녀 사건과 새로운 정책과제
- 마무리

긴급복지지원 주체의 역할 변화

누가 어떻게 없앨 것인가? 누가 변해야 하는가? 정책에 비해 우리 대중은 얼마나 변하고 있나?



송파 세모녀 사건 이후의 변화

삶의 현장에서 긴급복지 지원 기준을 마련하는 토대가 생겼다. 그러나 여전히 중앙정부 주도적 정책 흐름이 있다.
지자체 권한을 강화할 수 있는 가능성을 지속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

긴급복지지원법 2조 8(위기상황).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긴급지원 기준을 지자체가 판단
- 복지 사각지대 조사를 (지자체가)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
- 긴급지원 수급 계좌 보호
- 긴급복지 관련 신고 의무자 범위 확대

수급권자

복지사각지대의 해소 주체로서 지자체의 역할이 강조되었다.
사회보장신설변경협의 제도 활용을 전제로 한 지자체 권한 강화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

위기 상황에 처한 자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위기상황"이란 본인 또는 본인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구성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것을 말한다.
- <개정 2010.1.18., 2012.10.22., 2014.12.30.>
- 1. 주소득자(主所得者)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2.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3.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放任) 또는 유기(遺棄)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4. 가정폭력을 당하여 가구구성원과 함께 원만한 가정생활을 하기 곤란하거나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 5. 화재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 **6.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7.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증평 모녀 사건 이후의 변화

복지가 권리가 아닌 우리의 현실에서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홍보가 필요하다.

복지사각지대 해소 노력에도 불구하고
2018년 4월 증평 모녀 사건 발생

2018년 4월 증평군 모 아파트에서 40대 여성이 세 살 난 딸과 함께 숨진 채 발견된 사건으로, 남편과 시별 후 혼자 두 자녀와 생활고에 시달리던 중 자살한 것으로 추정된다. 모녀는 사망 후 세 달여 만에 아파트 관리비 연체가 계속되는 것을 이상하게 여긴 관리사무소 직원의 신고로 발견되었다.

긴급복지지원법 7조 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긴급지원사업에 관한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8. 12. 11.>

신고의무

사실상 모든 국민이 신고 의무를 가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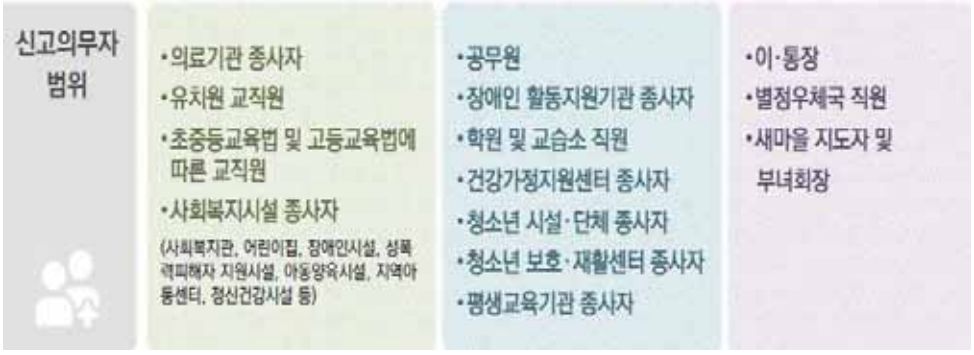
사회보장급여법 제13조(지원대상자 발견 시 신고의무) ① 누구든지 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빈곤 및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 인하여 사회보장급여를 필요로 하는 지원대상자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보장기관에 알려야 한다.

1. 사회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2. 장애인 활동지원기관의 장 및 그 종사자
3. 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장
4. 의료기사
5. 응급구조사
6. 구조대 및 구급대의 대원
7. 경찰공무원
8. 자치경찰공무원
9.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10. 어린이집의 원장 등 보육교직원
11. 유치원 교직원 및 강사 등
12. 초중고 교직원
13. 학원의 운영자·강사·직원…

신고 의무자

신고 의무자 범위가 지속적으로 확대되었다.

긴급복지지원법 제7조(지원요청 및 신고)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진료·상담 등 직무수행 과정에서 긴급지원대상자가 있음을 알게 된 경우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를 신고하고, 긴급지원대상자가 신속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12. 11.>



보건복지부(2019.6.7),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자 교육 PPT(최종 배포용)

긴급복지지원법: 실태조사

최소 1회 이상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

제7조의2(위기상황의 발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에 대한 발굴조사를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정기 발굴조사 또는 수시 발굴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법인·단체 등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의 거주지 등 현장조사 시 소속 직원의 동행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법인·단체 등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에 대한 발굴체계의 운영 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수립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12.30.]

긴급복지지원법: 지자체 권한 강화

우선 지원하고 부양의무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

제8조(현장 확인 및 지원)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제7조에 따른 지원요청 또는 신고를 받거나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을 찾아낸 경우에는 지체 없이 긴급지원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긴급지원대상자의 거주지 등을 방문하여 위기상황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위기상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경찰관서, 소방관서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현장 확인 결과 위기상황의 발생이 확인된 사람에 대하여는 지체 없이 제9조에 따른 지원의 종류 및 내용을 결정하여 지원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긴급지원대상자에게 신속히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긴급지원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우선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4.12.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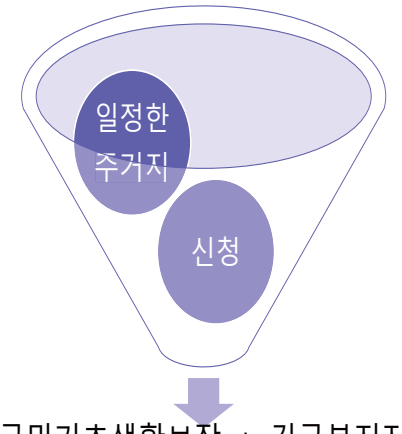
‘세모녀’ – 복지사각지대의 대명사

‘세모녀의 사회복지’ - 복지사각지대 대응 정책 과정

수원 세모녀 사건과 새로운 정책과제

마무리

수원 세모녀 사건이 던져준 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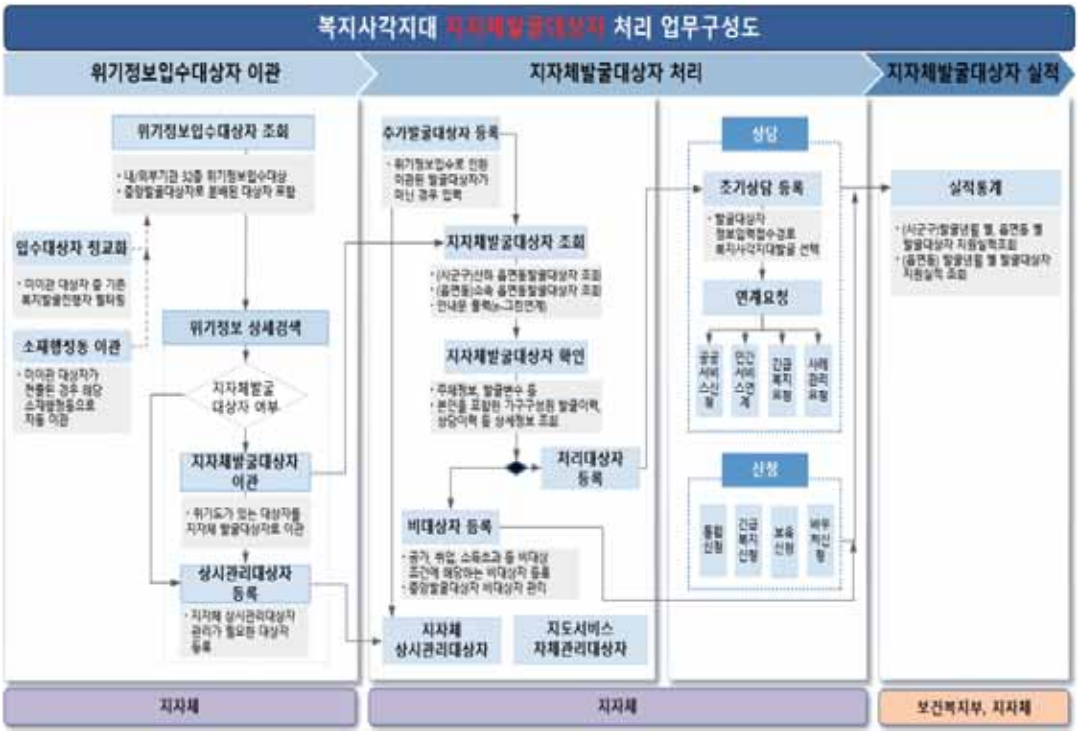
국민기초생활보장 + 긴급복지지원

긴급복지지원제도가 더욱 보완되고 지금까지도 많이 개선되었다. 그런데 기존 제도는 일정한 ‘거주지’에 있는 사람이 급여를 ‘신청’해서 받는다는 기본 전제가 있었다. 이 전제를 바탕으로 제도 보완을 해 온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전제를 뛰어 넘는 ‘주거 불명 + (자발적? 어떤 이유에서든지)신청 기피’라는 새로운 양상을 보였다.

기존 긴급복지지원제도의 틀을 뛰어 넘는 문제가 발생했다. 그러나 기존 복지사각지대 발굴 매뉴얼은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비대상자 등록 과정



출처: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2022.2), 2022년 읍면동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매뉴얼, 86쪽.

비대상자 등록 기준의 한계

비대상자 등록 처리 기준	
항목	내용
빈집	발굴대상자의 주소지로 현장조사를 나갔으나, 해당 주소지에 사람이 거주하지 않고 살림살이가 없는 빈집 상태일 경우에 입력합니다.
이사	발굴대상자를 조회한 결과 대상자가 전출 상태이거나, 현장조사 결과 대상자가 거주지역을 옮긴 경우에 입력합니다.
사망	발굴대상자의 주소지로 현장조사를 나갔으나, 대상자가 사망으로 확인된 경우에 입력합니다.
장기입원 (요양병원 포함)	발굴대상자의 주소지로 현장조사를 나갔으나, 대상자가 건강문제로 입원 중인 상태일 경우에 입력합니다.
장기출타	발굴대상자의 주소지로 현장조사를 나갔으나, 대상자가 외부에 머물고 있어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 입력합니다.
연락두절	발굴대상자의 주소지로 현장조사를 나갔으나, 대상자가 거주지에 거주하고 있지 않으면서 연락이 되지 않아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 입력합니다.
사회복지시설 입소	발굴대상자의 주소지로 현장조사를 나갔으나, 방문한 대상자가 사회복지시설에 입소한 경우에 입력합니다.
군입대 · 교정시설 입소	발굴대상자의 주소지로 현장조사를 나갔으나, 방문한 대상자가 군입대를 했거나 교정시설에 입소한 경우에 입력합니다.
소득재산초과	발굴대상자를 조회한 결과, 대상자의 소득과 재산이 중위소득 50% 이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 입력합니다. 취업상태로 인한 소득재산 초과의 경우는 "취업"으로 입력합니다. * "중요 확인사항"을 참조하여 조치한 후, 지원 필요성이 없을 경우 비대상자 처리
취업	발굴대상자를 조회하거나 현장조사를 실시한 결과, 대상자가 취업한 상태여서 지원이 불필요한 경우에 입력합니다.
기수급자	발굴대상자를 조회한 결과, 기초(생계, 의료, 주거, 교육)수급자 또는 긴급복지 대상자인 경우에 입력합니다. 차상위 대상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 "중요 확인사항"을 참조하여 조치한 후, 지원 필요성이 없을 경우 비대상자 처리
기상담 완료자	발굴대상자를 조회한 결과, 이미 초기상담을 3개월* 이내에 완료한 대상자인 경우에 입력합니다. * 3개월 이내에 공공서비스 신청 진행 중인 대상자 포함

장기입원, 사회복지시설 입소, 군입대, 교정시설 수감, 소득재산 초과, 취업, 기수급 등은 수급자가 처한 최종 상황이다. 이 상황을 보고 지원 비대상자로 등록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그러나 빈집, 이사, 장기출타, 연락두절 등은 대상자가 처해 있는 최종 상황이 아니다. 최종 상황을 확인할 때까지 끝까지 추적하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1. 매뉴얼 개정
2. 조사를 위한 충분한 인력 확보
   1) 광역 차원의 전담팀 구성
   2) 지자체 차원 지원인력 확보
   3)사회복지공무원 인력 확대

출처: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2022.2), 2022년 읍면동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매뉴얼, 96-97쪽

‘끝까지 추적’하는 시스템 구축

광역이 주도하면서, 필요할 경우, 경찰과 공조하여 위기가구를 발견하는 체계를 갖춘다.
이웃공동체의 관심을 통해 위기가구를 발견할 수 있는 노력을 지속한다.

빅데이터 활용 위기가구 포착 ➕ 최종 상태 파악까지 끝까지 추적

복지부	시도	시군
빅데이터 활용 정기적 발굴시스템 운영 (매 2개월 명단 통보) * 도: 차수별 6~8천명 정도	발굴된 명단 시군통보 및 현장 실사 독려 (시군 및 읍면동)	위기가구 현장 조사 및 조치결과 시스템 보고 (희망복지지원단, 찾아가는보건복지서비스팀)

이웃공동체

광역 주도
- 광역 전담팀
- 시군구 지원인력
- 경찰

비대상자 등록 처리 기준으로서 ‘빈집, 장기출타, 연락두절’을 삭제하고 조사대상 가구(개인)의 최종 상태를 파악할 때까지 등록 처리를 하지 않는다.

경상북도 사례

「이웃공동체의 제보 활성화, 시군 복지공무원 지원 인력 확대, 광역 전담팀 구성 + 경찰과 공조」하는 체계를 구축한다.

이웃공동체
- 카카오 희망Talk를 통한 제보 활성화
- 마음안심 서비스앱 - 취약가구 안전 확인

시군
- 지원인력 - 복지플래너 330명 (읍면동 당 1명)

광역
- 희망복지SOS팀

➕ 경찰 공조

궁극적으로 사각지대 발굴은 ⇒

전담인력 확충(공무원+보조인력) **+ 경찰 등 유관기관 공조 + 이웃공동체 확립이 필요**

출처: 경상북도 **2022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 대책**

‘세모녀’ – 복지사각지대의 대명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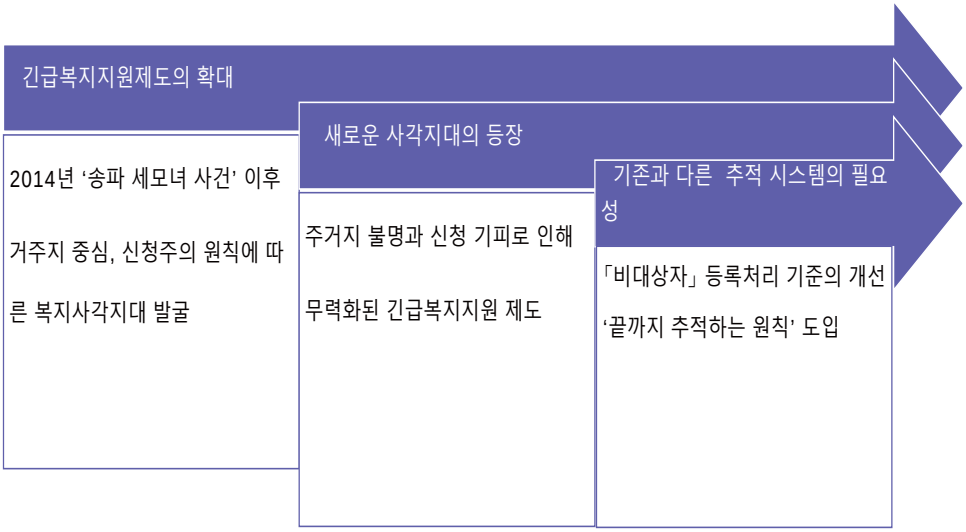
‘세모녀의 사회복지’ - 복지사각지대 대응 정책 과정

수원 세모녀 사건과 새로운 정책과제

마무리

수원 ' 세모녀 ' 사건과 새로운 과제

기존 제도는 일정한 거주지에 있는 사람이 급여를 신청해서 혹은 신청하게 해서 지원한다는 전제 하에 작동했다. 그리고 많은 성과가 있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기존 제도의 전제를 넘어서 '주거 불명 + (자발적?) 신청 기피'라는 새로운 양상을 보였다. 따라서 새로운 위기 감지와 추적 시스템이 필요하다.



과제

- 비대상자 등록 처리 기준 개정
- 지역 별 이웃공동체 제보 참여 활성화 대책 마련
- 사회복지공무원 업무 지원 인력 확보
- 광역시도 별 위기가구 추적전담팀 구성
- 경찰과 협조 체계 구축

기대효과

- 새롭게 출현하는 복지사각지대에 효과적으로 대응
- 이웃공동체 복원 및 형성에 따른 삶의 만족도 향상
- 지원 인력, 전담팀 구성 등에 따른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토 론 문]

김 태 완 연구실장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빈곤평등연구실

□ 오늘 의미 있는 자리에서 좋은 글과 함께 향후 우리나라 사회보장, 사회복지 발전을 위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 오늘의 발표와 토론을 통해 앞으로는 불행한 일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큰 틀에서 발표해주신 발표문의 내용에 동의하는 바이며, 지적하고 제안해 주신 사항들이 반드시 실천되었으면 합니다.

○ 저는 오늘 발표하신 글에 대해 간단히 의견을 드리고 또 다른 방향에서 사회복지제도의 개편이 필요하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 먼저 말씀드린데로 발표하신 논문에 담겨있는 문제제기와 현실적 대안에 대해 동의합니다.

○ 현재 사회복지제도가 가지고 있는 복지사각지대와 공공부조제도인 기초생활보장제도와 긴급복지지원제도가 가진 한계로 지원이 필요하신 위기가구, 취약계층이 충분히 지원받지 못하는 문제를 논문이 잘 지적하고 있습니다.

○ 무엇보다 위기가 포착되거나 발견될 경우 긴급복지지원제도가 우선적으로 이들 위기가구를 보호하고 지원해야 하기에 여러 번의 제도 개선을 진행해 왔지만, 여전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 발표문에 있는 것처럼 위기가구 조기 발굴을 위해 비대상자 등록기준을 개선해야 하고, 위기가구를 계속해 발굴하려는 체계 구축은 매우 필요한 것 같습니다.

○ 또한 적극 동의하는 사항은 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전담인력에 대한 사항입니다.

- 실제 읍면동 등에서 긴급복지를 담당하고 있는 인력은 매우 부족한 상태입니다. 코로나19를 지나며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긴급복지지원 예산이 대폭 확대되어도 전담인력 부족으로 위기가구를 위한 충분한 대응이 부족했던 것도 기억합니다.

- 발표문에서 제시한 사항들에 대한 체계적 구축이 우선되어야 하지만, 인력과 인프라에 대한 구비 또한 긴급히 해결해야 할 사항으로 여겨집니다.

□ 수원세모녀에 대한 기사를 보며, 추가적으로 개선이 되었으면 하는 것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 먼저,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넘어선 긴급하면서 현실적으로 발생하는 위기가구에 대한 보장이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생계급여 기준인 기준중위소득 30% 초과 가구에 대한 지원입니다.

- 수원세모녀 사례를 통해 보면, 이들 가구는 2000년 초반까지는 사업을 통해 안정적 생활을 해 왔지만, 부의 갑작스러운 부도로 갑작스러운 위기에 직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무 급증, 주거불안 문제가 동시에 발생하였지만, 우리 사회복지 제도가 이들 위기가구를 지원하지 못했습니다.

- 공공부조를 기준으로 보면 당시 자녀가 성인이라는 이유로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고, 일정 자산이 있어 지원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제 부양의무자 기준이 의료급여에만 남아 있지만, 재산기준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 또한 필요합니다.
- 더불어 생계급여를 초과한 위기가구를 도울 수 있는 제도가 긴급복지지원제도이지만 이 역시 발표문에 있듯이 복잡한 과정을 거쳐 선정되고 지원기간도 길지 않아 실제 위기를 벗어나기는 어렵습니다.
- 결론적으로 생계급여 지원기준인 기준중위소득 30% 초과 위기가구를 대상으로 일정기간 지원을 통해 이들이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조기에 구축되어야 합니다.

- 수원세모녀의 경우 위기 발생이후 25세 아들이 가사를 책임지고 부모와 건강이 좋지 않은 두 자매를 함께 돌봐야 하는 “영케어러”의 문제도 함께 발생하였습니다.
  - 즉 청년 혼자 가족을 부양하는 상황에서 국가가 함께 하지 못한 점, 건강하지 못한 두 자매를 위해 돌봄서비스가 역시 지원되지 못한 점 등이 동시에 발생했지만, 사회복지가 바로 지원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는 언제든 그리고 지금도 발생할 수 있다고 봅니다.
- 이후 아들 역시 질환으로 사망하고, 아버지 역시 비슷한 시기에 사망하면서 남겨진 가족에 대한 발굴과 지원이 없었다는 점입니다. 이 부문은 발제문에 있는 문제제기와 이에 대한 대응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마지막으로 현재 분절적으로 구축되어 있는 사회복지전달체계 개편 필요성입니다. 여러 연구자가 지적하고 있으며, 발표문에도 있듯이 현재의 사회복지전달체계는 복지부, 여가부, 고용부, 경찰청, 금융위 등 수많은 부처가 각자의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 각각의 부처가 위기 발생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고 하지만, 실제 그런지 근본적 문제 파악이 필요합니다.

○ 수원세모녀가 부도로 인해 채무 문제가 심각할 때, 금융위원회, 서민금융진흥원 등의 신용회복 서비스가 우선 작동하고 여기서 복지부나 여가부의 서비스체계로 연계만 해주었다면 발생할 문제를 조기에 차단할 수도 있었다고 봅니다.

○ 각부처에서는 위기가 발생하면 개선방안을 이야기 하면 상시적으로 제도간 연계, 서비스 간 연계를 강조합니다. 하지만 일선에서 직접적으로 대민서비스를 전공하는 전담인력이 자신의 전문분야를 제외하고는 다른 서비스가 무엇이 있고, 어디로 보내면 되는지 충분한 교육과 역량강화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 이번을 계기로 향후 사회복지전달체계에 대한 획기적 개편 방안이 마련되었으면 합니다.

□ 오늘의 발표에서 제기된 개선 방안 등이 실질적으로 수행되어, 또 다른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됩니다. 경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토 론 문]

정 중 규 정책실장

한국사회복지정책연구원

노자의 도덕경 73편에 '천망회회 소이불실(天網恢恢 疏而不失) 곧 하늘의 그물은 크고 성긴 듯하지만 빠뜨리지 않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처럼 하늘의 그물망은 촘촘하다는데, 우리 대한민국의 사회안전망은 아직도 허술하기 짝이 없습니다. 복지사각지대가 광범위하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제가 국민의당 시절 장애인위원장으로 선거 때만 되면 복지 관련 선거공약을 함께 만들면서 늘 '촘촘한 복지'를 내세웠지만 아직도 우리의 복지는, 촘촘하지 못하고 허술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것은 힘없는 자들을 더욱 힘없게 만들고, 아픈 사람들을 더욱 아프게 만들고, 소외된 자들을 더욱 소외시키는, 다시 말해 가진 자는 우대하고 가난한 자는 홀대하는 부우빈홀(富優貧忽)의 사회, 존경하는 경제학자 칼 폴라니가 '악마의 맷돌'이라 칭한 대로 서민들의 삶을 옥죄는 비인간적이고 반공동체적인 장치들이 산재하는 이런 사회에선 당연한 결과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특히 지난 3년에 걸친 코로나19 사태로 내수 경기가 급속하게 위축돼 소상공인·영세자영업자들이 줄줄이 폐업 위기에 몰리고, 실업자가 양산되면서 서민들의 삶의 질은 더욱 급전직하 추락하고 있습니다. 부익부빈익빈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면서 대거 발생하는 빈민층 곧 가난한 이들로 인해 이 사회엔 살아도 죽은 것 같은 목숨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 사회의 희망이 죽어가는 그들을 다시 살리는데서 시작됨은 말할 나위도 없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사회의 폐단은 한번 낭떠러지에 떨어지면 더 이상 기어 올라올 수 없는 절벽사회, 패자부활전이 용납되지 않을 만큼 가난한 이들을 짓밟는 사회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OECD(경제개발협력기구) 회원국 중 자살률이 가장 높은 국가가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심각한 것이 오늘 토론회의 주제인 가난한 이들이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리다 빚는 '가족 동반 자살'입니다.
가족은 인간 생활의 기초를 이루는 최소의 단위이자 그를 보호하는 울타리입니다. 동시에 가족은 사회라는 조직을 이루는 세포입니다. 사람이 그 몸의 세포들이 하나둘 죽어가면서 그 생명을 다해 죽음을 맞이하듯이, 사회라는 조직을 이루는 최소단위 세포인 가족(가정) 그 울타리가 심각하게 훼손당해 죽으면 그것은 사회공동체 붕괴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건강한 개인이 있어야 건강한 가족이 있으며, 건강한 가족이 있어야 건강한 사회가 되는데, 최근에 유독 가족 전체가 극단적 선택을 하는 비극적인 사건들이 잇따르고 있다는 것은 대한민국의 사회공동체가 얼마나 취약해지고 있는가를 반증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가족 동반 자살’도 문제지만, 저는 ‘세 모녀 사건’에서 보듯 가난한 이들 가운데에서 벌어지는 여성들의 비극에 주목합니다. 왜 ‘세 모녀’인가. 2014년 송파 세 모녀와 청주의 세 모녀 사건, 2018년 사망 후 5개월 만에 발견된 증평 모녀 사건, 2019년 성북구 네 모녀와 탈북 모자 사건, 얼마 전 우리 사회에 충격을 주었던 2022년 수원 세 모녀 사건 등등 이처럼 동일한 패턴의 비극이 끊임없이 이어지는 것을 보며 가난한 이들 가운데에서도 여성들이 빈곤과 여성차별이라는 이중질곡에 시달리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특히 아직도 굳건한 가부장사회에서 남편이나 아버지 같은 남성 가장이 부재한 여성들만의 가정일 경우 얼마나 취약한 상황으로 빠져 들어가는지가 드러난 것입니다.

또 하나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구축한 사회보장체계의 도움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등 긴급복지지원제도조차 신청을 기피할 만큼 우리 사회에 편만해 있는 가난한 이들의 자존심을 짓밟는 가난한 이들에 대한 그릇된 인식입니다. 송파 세 모녀나 수원 세 모녀들 역시 도움 받는 것을 기피했는데, 이런 현상은 마치 영국 영화 ‘나, 다니엘 블레이크(I, Daniel Blake, 2016)’를 떠오르게 만듭니다. 이 영화는 켄 로치 감독의 “사람들에게 ‘가난은 너의 잘못이다’라고 말하는 우리의 잔인함이 문제다”라는 말대로 가난한 이들의 자존심을 짓밟는 관료적 복지제도의 폐단을 짚고 있습니다. 약자와 소외계층의 안전망이 되어야 하는 복지정책이 공무원을 비롯한 공급자 위주의 효율적인 시스템으로 전락한 영국의 복지현실을 비판하고 있는데, 우리의 복지제도 역시 그런 측면이 없지가 않다고 봅니다.

가난은 진정 나라도 구제 못하는가. 대한민국이 GDP 3만 달러에 세계 10대 경제대국으로 올라선 지금, 아니라고 봅니다. 국가는 국민 모두가 최소한의 삶의 질은 보장받을 수 있을 정도로 뒷받침을 해줘야 할 것입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부익부빈익빈의 양극화 현상은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보지만, 적어도 천부인권이 가난에 의해 훼손되지는 않아야 한다고 봅니다. 가족이나 가정이 경제적 이유로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극단적 선택을 마음먹을 정도로 힘들어질 때 국가와 사회공동체가 나서 그들이 극단적 선택을 하지 않도록 도와야 할 것입니다. 물론 그를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있지만 부양의무제 등 제도 자체의 미흡함으로 복지사각지대를 양산하면서 가난한 이들에겐 완벽한 사회안전망은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급격한 경제성장 과정에서 파생된 불평등 문제로 사회안전망이 구멍 날 때마다 역대 정부는 그 피해자의 이름을 딴 법을 만들곤 했습니다. 이른바 ‘세모녀법’이라 칭하는 ‘긴급복지지원법’도 그렇게 탄생되었습니다. 오늘 발제자께서

긴급복지지원제도의 개선 과제로 제시하신 ▲비대상자 등록 처리 기준 개정 ▲지역별 이웃공동체 제보 참여 활성화 대책 마련 ▲시군 사회복지공무원 업무 지원 인력 확보 ▲광역시도 별 위기가구 '끝까지 추적하는' 추적전담팀 구성 ▲경찰과 협조 체계 구축 등에 저는 전적으로 동감을 표합니다.
하지만 비극적인 사건이 터진 후에야 사후약방문식 입법이 이뤄지거나, 긴급위기상황에 처한 이들에 대한 응급조치도 필요하지만, 그보단 가난한 이들이 극단적 선택을 하려는 상황에까지 가지 않도록 하는 예방조치가 더욱 필요하다고 봅니다. 긴급복지지원 시스템 강화 같은 단기적인 대책과 더불어 장기적인 예방 차원에서 우리 사회의 취약계층을 보듬으며 공동체 회복을 통해 사회적 면역력을 강화시키는 노력을 멈추지 말아야 할 이유입니다. 이것은 우리 사회에게 주어진 새로운 도전입니다.

도시의 주거형태가 대부분 아파트라 그렇겠지만, 이웃이 사라져버린 공동체 붕괴 현실이 이러한 '세 모녀 사건' 발생의 근본 원인이라고 보는 까닭입니다. 이웃 관계가 거의 단절되어버려 각자가 섬처럼 되어버린 이 시대에 공동체 의식을 되살리는 길을 아파트단지라는 특수한 주거환경에 맞게 찾아가야할 것입니다. 반상회나 주민자치회 같은 시스템을 제대로 운영 강화시키는 것도 한 방법일 것입니다. 주위에 살고 있는 가난한 이들과 특히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이웃들에 대해 평소에도 관심과 사랑을 보여주고 그들의 약한 목소리에 정부와 사회 구성원은 세심하게 귀기우리며 응답하는 그런 공동체 마음이야말로 진정한 복지국가로 나아가는 바탕이라고 봅니다.

지구상 어느 국가보다 양극화 현상이 심각한 대한민국에서 발생하는 '세 모녀 사건들'은 우리 사회가 재구조화에 나서길 촉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가난한 이들에겐 더욱 극심한 고통의 시간이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인류가 지구촌이라는 한 배를 타는 공동운명체임을 절실히 느끼게 만들었던 코로나19 펜데믹 시기, 다가오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는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인간의 존엄성과 생명의 가치를 우선으로 삼아 더불어 살아가라는 각성과 연대의식 그 새로운 여정으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급격한 산업화 과정 속에서 생존경쟁을 펼치며 승자독식의 이기주의가 정상인 것처럼 여겼던 이제까지의 사회와는 달리, 이웃의 아픔과 함께 하는 사회가 그 어느 때보다도 요구받고 있으며 지금 우리 모두는 새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한 그런 거룩하고 큰 싸움의 시간에 접어들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러한 공동체 의식은 새로운 것이 아니라 이미 산업화 이전 우리의 전통사회에서는 그야말로 전통이었습니다. 서로 돕고 협동하는 공동체 연대의

식으로 충만했던 아름다운 전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회복지 분야에 해마다 천문학적인 예산이 투자되고 있지만 여전히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이웃들이 왜 생기는지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생각해야할 것입니다.

흔히 '한강의 기적'이라고 부르는 지난 60년간의 경제성장은 대단했습니다. GDP 규모는 이제 전 세계 10위 안에 들어가고, 1인당 소득(GNI)도 서유럽 국가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수준입니다. 얼마 전에는 미국 시사주간지 'US뉴스&월드리포트'가 발표한 2022년 세계 국가별 국력 순위에서 대한민국이 일본을 앞질러 독일과 영국에 이어 6위에 올랐습니다. 또한 2021년 7월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 총회에서 선진국으로 격상되면서 대한민국은 1964년 UNCTAD 창설 이래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도약한 유일한 나라가 됐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스스로 우리나라를 선진국으로 부르는데 흔쾌함이 들지 않는데, 바로 세 모녀 사건과 같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등 갈수록 극심해지고 있는 경제적 불평등으로 붕괴 해체 당하고 있는 사회의 모습을 목도하고 실감하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부자는 갈수록 부자가 되고, 부자 중에서도 최상층은 더욱 큰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은 갈수록 가난해지고 그 수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거기 우리 민족의 고유한 공동체 정신 그 전통을 되살리고 사회안전망을 튼튼히 하여 대한민국을 명실상부한 선진복지국가로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정종현 시인의 '섬'이라는 시에 "사람들 사이에 섬이 있다. 그 섬에 가고 싶다"는 표현을 저는 참으로 좋아하는데, 그처럼 섬처럼 각자 고립되어 있는 우리 사회에 섬과 섬을 잇는 다리를 부지런히 놓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부 록

◆ 연구회 소개
◆ 연구회 토론회 개최 연혁
◆ 공지사항
◆ 협력기관

▣ 연구회 소개 ▣

사)선진복지사회연구회
www.sswkorea.org

● 설립목적 :

대한민국이 선진복지국가로 가는데 필요한 복지정책 및 사회복지에 대한 사회인식 제고를 위한 각종 연구, 조사, 계몽 활동 및 복지전달체계의 문제점 파악 및 해소기능을 수행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공헌하고 이를 위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목적으로 함.

● 연 혁 :

2009. 10. 15 창립
2011. 10 비영리민간단체 등록(경기도 제 1237호)
2012. 10 법인설립허가 (경기도 제 2012-01-90호)
2013. 07 기획재정부 지정기부단체 등록
2014. 09 대통령직속 국민대통합위원회 시민사회소통부 협력단체
2014. 11 비영리민간단체등록(보건복지부 제 196호)
2013~『제 2인생 설계를 위한 전문가 과정 』
시니어LIFE코디네이터 자격증 수여/보건복지부 승인, 한국직업능력개발원(등록번호2015-001578)
2009. 10~ 분기별 복지 현안정책 토론회 개최
2014~ 성남시 사회복지박람회 부스 운영 참가
2015 행정안전부 비영리민간단체공익활동지원사업 선정
휴먼네트워크 멘토링 지원사업 (보건복지부)
2016 행정자치부 비영리민간단체공익활동지원사업 선정
나눔국민운동본부 권역별 나눔교육 수행기관 (보건복지부)
통일부『 통일박람회 』참가-부스명: 통일이랑 복지랑 step by step!
여성가족부 청소년유해방송물 모니터링사업
제 7 회 대한민국 나눔대축제 부스운명
2017 행정자치부 비영리민간단체공익활동지원사업 선정
여성가족부 양성평등지원사업 선정
나눔국민운동본부 권역별 나눔교육 수행기관 선정(보건복지부)
제 8 회 대한민국 나눔대축제 부스참가
하반기 경기도자원봉사 우수프로그램 공모지원사업 선정
2018 행정안전부 비영리민간단체공익활동지원사업 선정
경기도자원봉사 우수프로그램 공모지원사업선정
나눔교육운동본부 생애주기별 나눔교육 선정 (보건복지부)
제 9 회 대한민국 나눔대축제 부스참가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스마트 기술 및 조달전시회 컨퍼런스
2019 행정안전부 비영리민간단체공익활동지원사업 선정
제 10 회 대한민국나눔대축제 부스 운영
제 5 회 (그룹홈)청소년과 중장년층이 함께 하는 멘토링 공감여행
제 5 회 중장년세대 Begin 한마당(9.28)
창립 10주년 기념 사회복지미래를 위한 Talk 콘서트
2020 행정안전부 비영리민간단체공익활동지원사업 선정
나눔교육운동본부 생애주기별 나눔교육 선정 (보건복지부)
제 6 회 (그룹홈)청소년과 중장년층이 함께 하는 멘토링 제주공감여행
제 6 회 중장년세대 Restsrt 한마당
제 11 회 대한민국 나눔대축제
2021 행정안전부 비영리민간단체공익활동지원사업 선정
기획재정부 지정기부단체 재허가(12.31)
제 12 회 대한민국 나눔대축제
제 7 회 어르신과 중장년층이 함께 하는 농촌일손돕기 및 멘토링 공감여행
제 7 회 중장년세대 앙코르 한마당
2022 행정안전부 비영리민간단체공익활동지원사업 선정(8년 연속)

▣ 연구회 토론회 개최 연혁 ▣

● 2022. 10. 26 (수) 국회의원회관 제 9 간담회의실

주제 : 제 3의 송파, 수원 3 모녀사건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

제 1주제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포함 한 소득보장제도 개선방향
주제발표자 : 윤 성 원 입법조사관 (국회입법조사처)
토 론 자: 박 영 용 회장 (한국사회복지행정연구회)
제 2주제 : 세모녀의 사회복지-현실과 대책
주제발표자 : 정 재 훈 교수 (서울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토 론 자: 김 태 완 연구실장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빈곤평등연구실)
공동주최: 국민의힘 약자와의동행위원회
사)선진복지사회연구회
축 사: 김 미 애 국회의원, 이 종 성 국회의원
1부 사회: 석 춘 지 前 위례종합사회복지관 관장
2부 좌장: 이 정 숙 사) 선진복지사회연구회 회장
후 원: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 2022. 06. 29 (수) 국회의원회관 제 2 세미나실

주제 : 한국연금체계의 개혁방향과 과제

주제발표자 : 오 건 호 정책위원장 (내가만드는복지국가)
토 론 자:
1. 김 원 섭 교수 (고려대학교 사회학과)
2. 강 성 호 박사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
3. 주 은 선 교수 (경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공동주최: 성 일 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사)선진복지사회연구회
1부 사회: 김 은 경 교수 (삼육대학교/ 본 연구회 사무국장)
2부 좌장: 이 용 하 前 국민연금연구원 원장
후 원: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관련 언론기사
http://www.chungnam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667130 충남일보
http://www.m-economynews.com/news/article.html?no=33995이 이코노미뉴스
http://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5189 여성신문
http://www.kukinews.com/newsView/kuk202206290157 쿠키뉴스
https://www.news1.kr/articles/?4725157 뉴스1
http://www.newstnt.com/news/articleView.html?idxno=221246 뉴스티앤티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22/06/570759/ 매일경제
https://www.ccdail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138926 충청일보
https://www.nbntv.co.kr/news/articleView.html?idxno=979459 내외경제TV
http://www.eopennews.com/news/view.php?no=30522#none;open뉴스
http://www.ngonews.kr/sub_read.html?uid=134621한국ngo신문
https://www.asiailbo.co.kr/posting/_extLink.php/21010100439495 아시아일보
http://www.hkbs.co.kr/news/articleView.html?idxno=683209 환경일보
http://www.snilbo.co.kr/sub_read.html?uid=44651성남일보
http://www.cndnews.co.kr/sub_read.html?uid=349966 뉴스충청인

http://www.bokji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94540 복지연합신문

● 2022. 05. 19 (목) 국회의원회관 제 2 소회의실

토크콘서트 주제 : 新국제질서와 한국정치의 도전:

-복지 및 주요 정책과 제도의 정치적 대응력 진단-

□초청강사: 최 연 혁 교수 (스웨덴 린네대학교 정치학과)
□공동주최: 송 석 준 국회의원
□격려사: 차 흥 봉 초록우산어린이재단 대표이사/前보건복지부장관
□축 사: 서 상 목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회장/ 前보건복지부장관
1부 사회: 안 자 희 박사 (본 연구회 부회장)
2부 사회: 이 정 숙 회장 사)선진복지사회연구회)
후 원: 행정안전부
※관련 언론기사
https://www.get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585170 G글로벌경제신문
https://www.dnews.co.kr/uhtml/view.jsp?idxno=202205210923386180207 e대한경제
http://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3486 여성신문
http://www.bokji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93232 복지연합신문

● 2021. 12. 10 (수) 프레스센터 18층 외신기자클럽

주 제 : 차기정부에 바라는 복지정책

-사회복지, 보건·의료, 고용·노동, 교육, 주거(부동산)-

□기조발제 및 사회복지: 최 균 교수 (한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보건·의료: 이 기 효 교수 (인제대학교 보건대학원)
□고용·노동: 이 지 만 교수 (연세학교 경영학과)
□교 육: 양 정 호 교수 (성균관대학교 교육학과)
□주거(부동산): 서 진 형 교수 (경인여자대하교. 대한부동산학회 회장)
축 사: 김 상 훈 국회의원
1부 사회: 안 자 희 박사 (본 연구회 부회장)
2부 사회: 김 미 령 소장(대구대학교 고령사회연구소)
후 원: 행정안전부
※관련 언론기사
https://www.dnews.co.kr/uhtml/view.jsp?idxno=202112111431412520360 e대한경제
https://www.dnews.co.kr/uhtml/view.jsp?idxno=202112111431412520360 환경일보
http://www.snilbo.co.kr/sub_read.html?uid=44311 성남일보
http://www.sisafoc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69677 시사포커스
https://www.get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564115 글로벌경제
http://www.100ssd.co.kr/news/articleView.html?idxno=83333 백세시대
https://www.ccdail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095144 이로운넷

http://www.bokji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89151 복지연합신문

● 2021. 11. 10 (수) 프레스센터 18층 외신기자클럽

주 제 : 복지 포퓰리즘, 어떻게 막을 것인가?

주제발표자 : 김 용 하 교수 (순천향대학교 IT금융경영학과)
토 론 자:

1. 조 성 환 교수 (경기대학교 정치전문대학원)
2. 김 정 학 교수 (고려대학교 행정전문대학원)
3. 김 상 철 교수 (한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4. 최 연 혁 교수 (스웨덴 린네대학교 정치학과)

축 사: 김 상 훈 국회의원
1부 사회: 이 윤 진 교수 (서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2부 사회: 이 정 숙 회장 (본 연구회 회장)
후 원: 행정안전부

※관련 언론기사
https://www.mk.co.kr/news/society/view/2021/09/892499/ 데일리안
https://www.dnews.co.kr/uhtml/view.jsp?idxno=202111131339373320664 e대한경제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11111000503 뉴스핌
http://www.hkbs.co.kr/news/articleView.html?idxno=655016 환경일보
http://www.snilbo.co.kr/sub_read.html?uid=44202 성남일보
http://www.sisafoc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68342 시사포커스
https://www.get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559521 글로벌경제
http://www.ngonews.kr/sub_read.html?uid=129880 한국NGO신문
https://www.ccdail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095144 충청일보
http://m.bokji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88450 복지연합신문

● 2021. 10. 19 (화) 프레스센터 18층 외신기자클럽

주 제 : 중장기 재정 건전성 유지를 위한 정책 방향

주제발표자 : 김 우 철 교수 (서울시립대학교 세무학과)
토 론 자:
1. 이 태 석 연구위원 (한국개발연구원 공공경제연구부)
2. 주 원 실장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
3. 이 영 숙 센터장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보장재정통계연구센터)
4. 정 창 률 교수 (단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경실련 사회복지위원장)

축 사: 이 효 수 전 영남대학교 총장
1부 사회: 김 기 영 겸임교수 (중앙대학교 행정대학원/ 본 연구회 이사)
2부 좌장: 황 명 진 교수 (고려대학교 사회복지학과)
후 원: 행정안전부

※관련 언론기사
http://www.snilbo.co.kr/sub_read.html?uid=44116 성남일보
http://www.ngonews.kr/sub_read.html?uid=129320 한국NGO신문
https://www.dnews.co.kr/uhtml/view.jsp?idxno=202110201824522680634 e대한경제
http://www.100ssd.co.kr/news/articleView.html?idxno=81620 백세시대
http://www.bokji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87676 복지연합신문
http://www.sisafoc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67269 시사포커스
https://www.ccdail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088325 충청일보

● 2021. 9. 15 (수) 프레스센터 18층 외신기자클럽

주 제 : 차기 정부의 복지 : 사회복지발전을 위한 복지플랫폼이 필요하다.

주제발표자 : 김 원 식 교수 (건국대학교 경제통상학과)
토 론 자:
1. 장 영 신 정책연구실장 (한국사회복지협의회)
2. 박 영 용 회장 (한국사회복지행정연구회)
3. 김 광 병 교수 (청운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인천남동구지역사회보장협의체 공동위원장)

4. 김 은 하 센터장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연구센터)

5. 이 상 철 실장 (한국경영자총협회 홍보실)

축 사: 차 흥 봉 대표이사 (초록우산어린이재단/전 보건복지부 장관)

후 원: 행정안전부

1부 사회: 안 자 희 부회장 사)선진복지사회연구회

2부 사회: 이 정 숙 회장 사)선진복지사회연구회

※관련 언론기사

https://www.mk.co.kr/news/society/view/2021/09/892499/ 매일경제
https://www.dailian.co.kr/news/view/1033805 데일리안
http://www.ngonews.kr/128449 한국NGO신문
http://www.snilbo.co.kr/44068 성남일보
https://www.dnews.co.kr/uhtml/view.jsp?idxno=202109171555584220949 e대한경제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10915001201 뉴스핌
http://www.ccdail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083053 충청일보

● 2021. 8. 24 (화) 프레스센터 18층 외신기자클럽

주 제 : 코로나베이비, 출생감소 대안은 없나?

주제발표자 : 김 동 섭 교수 (한림대학교 /前조선일보 논설위원, 보건복지전문기자)

토 론 자:

1. 박 기 남 위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인국보건복지협회 사무총장)
2. 이 윤 진 교수 (서원대학교 사회복지학부)
3. 박 선 권 입법조사관 (국회입법조사처 사회문화조사실 보건복지여성팀)
4. 김 충 환 과장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총괄과)

후 원: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1부 사회: 김 은 경 삼육대학교 겸임교수/ 사)선진복지사회연구회 사무국장

2부 사회: 이 정 숙 회장 사)선진복지사회연구회

※관련 언론기사

https://www.mk.co.kr/news/society/view/2021/08/823154/ 매일경제
https://www.dailian.co.kr/news/view/1026177/?sc=Daum 데일리안
http://www.ngonews.kr/sub_read.html?uid=127788 한국NGO신문
http://www.bokji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86300 복지뉴스
http://m.snilbo.co.kr/a.html?uid=43991 성남일보
https://m.dnews.co.kr/m_home/view.jsp?idxno=2021082813214698701 85 대한경제
https://m.newspim.com/news/view/20210826000451 뉴스핌
https://www.ccdail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078304충청일보
https://www.ccdail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078304 디지털타임스
https://www.chosun.com/national/obituary-personnel/2021/08/24/OJCOKU6SNFEP5IIDMLUAXXRBCA/ 조선일보
http://www.hkbs.co.kr/news/articleView.html?idxno=645372 환경일보

● 2021. 6. 16 (수) 프레스센터 19층 매화홀

주 제 : 청년 일자리, 어떻게 해결 할 것인가?

주제발표자 : 김 태 기 명예교수 (단국대학교 경제학과)

토 론 자:

1. 김 주 섭 선임연구위원 (한국노동연구원 고용정책연구본부)
2. 이 재 모 교수 (영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사회복지학과)
3. 김 대 광 청년 (취업후 퇴사, 창업/ 챕터서울 대표)
4. 이 형 준 본부장 (한국경영자총협회 고용사회정책본부)

후 원: 행정안전부

※관련 언론기사
http://www.get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501955 글로벌경제신문_
https://www.dailian.co.kr/news/view/940788/?sc=Daum 데일리안
http://www.ngonews.kr/sub_read.html?uid=121762 한국NGO신문_
http://www.bokji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80293 복지뉴스
http://www.snilbo.co.kr/sub_read.html?uid=43050 성남일보_
https://www.dnews.co.kr/uhtml/view.jsp?idxno=202011291020598640301대한경제
http://www.naewoe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310700 내외일보_
http://www.100ssd.co.kr/news/articleView.html?idxno=73058 백세시대 __
http://www.newspim.com/news/view/20201130000417 뉴스핌 _
https://www.mk.co.kr/news/society/view/2020/11/1229533/ 매일경제 _
http://www.silveri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5784 실버아이뉴스

● 2020. 11. 26 (목) 프레스센터 19층 매화홀

주 제 : 고령사회의 노인자원봉사 및 코로나 이후의 활성화 방안

주제발표자 : 김 미 령 교수 (대구대학교 지역사회개발 · 복지학과 / 고령사회연구소장)

토 론 자:

1. 박 양 숙 소장 ((사) 안양시 자원봉사센터)
2. 황 진 수 명예교수 (한성대학교)
3. 우 보 환 본부장 (대한노인회 노인자원봉사지원부)
4. 박 기 준 과장 (보건복지부 노인지원과)

후 원: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관련 언론기사
http://www.get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501955 글로벌경제신문_
https://www.dailian.co.kr/news/view/940788/?sc=Daum 데일리안
http://www.ngonews.kr/sub_read.html?uid=121762 한국NGO신문_
http://www.bokji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80293 복지뉴스
http://www.snilbo.co.kr/sub_read.html?uid=43050 성남일보_
https://www.dnews.co.kr/uhtml/view.jsp?idxno=202011291020598640301대한경제
http://www.naewoe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310700 내외일보_
http://www.100ssd.co.kr/news/articleView.html?idxno=73058 백세시대 __
http://www.newspim.com/news/view/20201130000417 뉴스핌 _
https://www.mk.co.kr/news/society/view/2020/11/1229533/ 매일경제 _
http://www.silveri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5784 실버아이뉴스

● 2020. 10. 08 (목) 프레스센터 19층 국화실

주 제 : 국내외 노인인권 보호증진 활동현황과 노인단체의 역할

주제발표자 : 박 영 란 교수 (강남대학교 실버산업학과)

토 론 자:

1. 한 정 란 교수 (한서대학교 보건상담복지학과/ 한국노년학회장)
2. 박 노 숙 회장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 목동실버복지문화센터 관장)
3. 백 승 민 박사 (아셈노인인권정책센터)
4. 이 동 우 사무관 (국가인권위원회 사회인권과)

후 원: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관련 언론 기사
https://www.chosun.com/national/people/2020/10/08/YI2ZT44U2BA27K5ZDXK4QYIHOQ/?utm_source=daum&utm_medium=original&utm_campaign=news 조선일보
http://www.bokji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79253 복지연합신문
https://www.mk.co.kr/news/society/view/2020/10/1032331/ 매일경제
http://m.ngonews.kr/120618 한국NGO신문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01010000108 뉴스핌
http://m.getnews.co.kr/view.php?ud=EJ0815060348774ecd436290_16 글로벌경제신문
https://www.dailian.co.kr/news/view/925948 데일리안
http://www.100ssd.co.kr/news/articleView.html?idxno=71747 백세시대

https://www.dnews.co.kr/uhtml/view.jsp?idxno=202010110939375520029 e대한경제
http://www.snilbo.co.kr/sub_read.html?uid=42859 성남일보
http://www.ccdail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009211 충청일보
http://www.silveri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5484 실버아이뉴스

● 2020. 09. 24 (목) 프레스센터 18층 외신기자클럽

주 제 : 위드코로나 시대의 보건의료 인력정책-국민중심 접근

주제발표자 : 이 기 효 교수 (인제대학교 보건대학원)
토 론 자:
1. 신 영 석 신임연구위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정책연구실 건강보험연구센터)
2. 정 형 선 교수 (연세대학교 보건과학대학 보건행정학과/ 연세대의료복지연구소장)
3. 이 태 윤 기자 (중앙일보 복지행정팀)
4. 홍 선 미 교수 (한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커뮤니티케어 전문위원회 위원장)

후 원: 행정안전부

※관련 언론 기사
https://www.mk.co.kr/news/society/view/2020/09/988321/ 매일경제
https://news.joins.com/article/23879571 중앙일보
https://www.dailian.co.kr/news/view/922819/?sc=Daum 데일리안
http://www.bokji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79018 복지연합신문
http://www.ccdail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007219 충청일보
http://www.getnews.co.kr/view.php?ud=2020092310485232144ecd436290_16 글로벌경제신문
http://www.newspim.com/news/view/20200924001066 뉴스핌
http://www.kha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04871 병원신문
http://medipana.com/news/news_viewer.asp?NewsNum=263396&MainKind=A&NewsKind=5&vCount=12&vKind=1 메디파나뉴스
http://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03206 청년의사
http://www.yakup.com/news/index.html?mode=view&cat=14&nid=249511 약업신문
http://www.snilbo.co.kr/sub_read.html?uid=42799 성남일보
http://www.silveri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5438 실버아이TV/NEWS
http://www.ngonews.kr/sub_read.html?uid=120423한국NGO신문

● 2020. 07. 21 (화) 국회도서관 소회의실

주 제 : 기본소득, 복지정책인가? 포퓰리즘인가?

제 1주제: 기본에서, 기본소득제를 생각한다. 기본소득제를 비판하는 3가지 이유
주제발표자 : 홍 경 준 교수 (성균관대 사회복지학과)
토 론 자 : 오 건 호 공동위원장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제 2주제: 한국복지국가 발전, 사회보장의 강화로 풀어야
주제발표자 : 양 재 진 교수 (연세대 행정학과/연세대 복지국가연구센터소장)
토 론 자: 1. 윤 홍 식 교수 (인하대 사회복지학과/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장)
2. 신 성 식 복지전문기자 (중앙일보)
개 회 사: 김 상 훈 국회의원
축 사: 차 흥 봉 前보건복지부 장관
격 려 사: 이 갑 산 범사회시민단체연합 상임대표
1부 사회: 조 중 근 회장 사)한국지속가능기업연구회
2부 사회: 이 정 숙 회장 사)선진복지사회연구회
후 원: 행정안전부

※관련 언론 기사
http://electimes.com/article.php?aid=15959989402026650 18전기신문

http://www.ngonews.kr/sub_read.html?uid=119225한국NGO신문
https://www.dailian.co.kr/news/view/906731?sc=Daum데일리안
http://www.snilbo.co.kr/sub_read.html?uid=42548성남일보
http://www.kmaeil.com/news/articleView.html?idxno=233073경인매일
http://www.naewoe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289839내외일보
http://www.bokji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77742복지연합신문
http://www.newspim.com/news/view/20200720000980뉴스핌
http://www.eroun.net/news/articleView.html?idxno=12805이로운넷
http://www.kpi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1953한국정책신문

● 2020. 06. 3 (수) 국회의원회관 제 2 세미나실

주 제 : 코로나사태의 지역보건과 커뮤니티케어의 역할과 전망

주제발표자: 황 명 진 교수 (고려대학교 공공사회학과장/복지대학원 주임)
토 론 자:
1. 이 진 한 기자 (동아일보 의학전문)
2. 사공 정 규 교수 (동국대학교 의과대학 정신건강의학과)
3. 공 선 희 전문연구위원 (제주연구원 고령사회연구센터)
4. 임 강 섭 팀장 (보건복지부 커뮤니티케어 추진단)

1부 사회: 김 기 영 교수 중앙대학교 행정대학원
2부 좌장: 이 정 숙 선진복지사회연구회 회장
후 원: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김 상 훈 국회의원
협력단체: 사)한국지속가능기업연구회
사)서울시보건협회
한국사회봉사연합회
범시민사회단체연합

※ 지난 6월 3일 '코로나사태의 지역보건과 커뮤니티케어의 역할과 전망' 토론회는 1)본 연구회 홈페이지 동영상 자료실과 2)국회방송 주 3)복지 TV 주소를 클릭하시면 본 토론회를 다시 보기 할 수 있습니다.
국회방송:
https://www.natv.go.kr/renew09/brd/formation/last_pro_vw_detail.jsp?programId=859&infoId=34414&index=942&gotopage=4
복지TV: https://tv.naver.com/v/14221827

※관련 언론 기사
http://electimes.com/article.php?aid=1591324954199726018 전기신문
http://www.100ssd.co.kr/news/articleView.html?idxno=69190 백세시대신문
http://www.rwn.co.kr/news/articleView.html?idxno=55373 농촌여성신문
http://www.ngonews.kr/sub_read.html?uid=118585 한국NGO신문
https://www.nongmin.com/news/NEWS/POL/ASM/323188/view 농민신문
http://sundaytimes.kr/View.aspx?No=864001 선데이타임즈
https://www.dailian.co.kr/news/view/895050?sc=Daumlogo 데일리안
http://www.snilbo.co.kr/sub_read.html?uid=42348 성남일보
http://www.kmaeil.com/news/articleView.html?idxno=225837 경인매일
http://medipana.com/news/news_viewer.asp?NewsNum=257956&MainKind=A&NewsKind=5&vCount=12&vKind=1 메디파나
http://www.bosa.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28083 의학신문
http://www.medifonews.com/news/article.html?no=153431 메드포뉴스
http://www.getnews.co.kr/view.php?ud=20200603152624232 4ecd436290_16 글러벌경제신문
http://www.naewoe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284830 내외일보
http://www.bokji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76731 복지연합신문

● 2019. 11. 7(목) 프레스센터 20층 프레스클럽

주 제 : 사회복지 전문가가 말하는 대한민국 사회복지 현 좌표는?

토크발표자:
1. 차 흥 봉 대표이사 (초록우산어린이재단 / 전 보건복지부 장관)
2. 김 용 하 교수 (순천향대학교 금융경제학과/ 제 9.10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

3. 성 규 탁 교수 (미국남가주대학교 석좌교수/ 글로벌 문화실천나눔포럼 상임대표)

4. 조 성 철 이사장 (한국사회복지공제회설립명예 이사장/ 제 17.18대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회장)

1부, 3부 사회: 강신성 박사

2부 토크콘서트 진행: 이정숙 선진복지사회연구회 회장

후 원: 행정안전부

※관련 언론 기사

http://fnewstv.com/news/newsview.php?ncode=1065590229774209 파이낸셜경제
http://moneys.mt.co.kr/news/mwView.php?no=2019111116168042040&outlink=1돈이 보이는 스페셜 뉴스 Money S
http://www.ngonews.kr/sub_read.html?uid=114935 한국NGO신문
http://www.ccdail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035735 충청일보
http://www.dailian.co.kr/news/view/841945 데일리안
http://www.ngtv.tv/news/articleView.html?idxno=72889 엔지티비
http://www.snilbo.co.kr/sub_read.html?uid=42348 성남일보
http://electimes.com/article.php?aid=1573518309189542096 전기신문
http://www.bokji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73526 복지연합신문

● 2019. 07. 17(수) 국회의원회관 제 2 세미나실

주 제 : 포용적 복지 정책과 지속가능성

주제발표자: 김 용 하 교수 (순천향대학교 금융경제학과)

토 론 자:

1. 조 중 근 교수 (한국지속가능기업연구회)
2. 신 소 정 교수 (가톨릭관동대학교 치매전문재활학과 학과장)
3. 김 동 섭 논설위원 (조선일보 보건복지전문기자)

후 원: 행정안전부

※관련 언론 기사

http://www.electimes.com/article.php?aid=1563944931183318035 전기신문
http://www.wngo.kr/sub_read.html?uid=112406 한국NGO신문
http://www.focusnews1.com/news/articleView.html?idxno=30679 포커스투데이
http://www.globalnewsagency.kr/news/articleView.html?idxno=124572 GV글러벌뉴스통신
http://www.100ssd.co.kr/news/articleView.html?idxno=62881 백세시대신문
http://www.dailian.co.kr/news/view/811721/?sc=naver 데일리안
http://www.nwt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8278 내외통신
http://www.bokji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71244 복지연합신문
http://www.silveri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3835 실버아이뉴스
http://www.snilbo.co.kr/sub_read.html?uid=42348 성남일보
http://www.gukj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147906 국제신문

● 2019. 05. 09(목) 광화문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

주 제 : 노인연령 상향 쟁점과 정책과제

주제발표자: 정 순 돌 교수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토 론 자:

1. 김 미 령 교수 (대구대학교 고령사회연구소장)
2. 이 상 이 교수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
3. 황 남 희 연구의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인구정책연구실 고령사회연구센터)

후 원: 행정안전부

※관련 언론 기사

https://news.v.daum.net/v/20190509143641930?f=o 국가기간뉴스 통신사 연합뉴스
https://news.v.daum.net/v/20190509143644931?f=o 국가기간뉴스 통신사 연합뉴스
http://moneys.mt.co.kr/news/mwView.php?no=2019051011178029947&outlink=1 머니S
http://www.wngo.kr/sub_read.html?uid=111052 한국NGO신문
http://www.dailian.co.kr/news/view/794496 데일리안
http://www.100ssd.co.kr/news/articleView.html?idxno=61235 백세시대신문
http://www.bokji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70038 복지연합뉴스

http://www.silveri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3575 실버아이뉴스
http://www.ngonewsi.com/news/article.html?no=13751 시민운동연합신문
http://electimes.com/article.php?aid=1558086391179232018 전기신문
http://www.snilbo.co.kr/sub_read.html?uid=40346 성남일보

● 2018. 10. 16(화) 광화문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

제 1 주제 : '노인 자살률 낮출수 없나?"
-대인관계 이론을 중심으로

주제발표자: 현 명 호 교수(중앙대학교 심리학과)
토 론 자: 양 두 석 교수(안실연 자살예방센터장)

제 2 주제 : '한국 노인의 고령화 과정에서의 자살 위기진단"
-나이 듦에 대한 사회적 통증과 배제

주제발표자: 박 지 영 교수(상지대학교 사회복지학과)
토 론 자 : 김 종 래 대표(복지연합신문)

1부 사회 : 문 승 권 박사 (본 연구회 운영위원)
2부 사회 : 조 성 철 (前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회장)
후 원: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복지TV, 백세시대신문, 한국고령화산업포럼, 생명연대

● 2018. 05. 02 국회의원회관 제 3 간담회의실

주 제 : '정치제도의 개혁, 사회복지발전에 왜 필요한가?"

주제발표자: 홍 경 준 교수 (성균관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장/사)좋은나라 연구원 이사장)
토 론 자:
1. 양 재 진 교수 (연세대학교 사회과학대학행정학과/ 연세대 복지국가연구센터 소장)
2. 정 종 훈 기자 (중앙일보)
3. 노 대 명 박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
1부 사회: 이 진 박사 (국회 사무처 정책연구위원)
2부 사회: 김 진 학 박사 (본 연구회 이사/ 전 한국사회복지행정연구회 회장)

● 2017. 10. 17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

베이비부머 세대의 일과 건강 -장기요양보험과 중장년 실업대책 및 재교육-

제 1 주제 : 노인 장기요양 보험제도의 선진적 운양방식 모색
주제 발표자 : 선 우 덕 명예연구위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토론자 :
1. 서 동 민 교수 (백석대학교 사회복지학과)
2. 김 동 섭 보건복지전문기자 (조선일보)
3. 유 승 호 교수 (건국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성북구치매지원센터장)

제 2주제 : 중장년 실업대책과 재교육운영방식 모색

주제발표자 : 김 영 생 선임연구위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토론자 :

1. 한 국 은 초빙교수 (숭실대학교)
2. 최 상 덕 연구위원 (한국교육개발원)
3. 지 은 정 부연구위원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주 최 : 사)선진복지사회연구회
지식협동조합 좋은나라 사)좋은나라연구원
리더십한림원
사회복지교육실천포럼
한국사회복지포럼

후 원 :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 2017. 06. 29 국가인권위원회 11층 배움터

기조 발제 및 좌장: **노인복지정책 방향: 고령인력 참여복지(Smarter Ageing)**
-정 경 배 전 한국보건사회연구회 원장

제 1주제 : 사회복지서비스 과제: 복지체감도와 현실성

주제발표자: 김 미 혜 교수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제 2주제 : 문재인정부의 노인 건강과 돌봄의 공약에 대한 평가와 과제

주제발표자: 전 용 호 교수 (인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제 3주제: 문재인 정부의 조세정책 방향과 복지재원 조달방안

주제발표자: 김 재 진 선임연구위원 (한국조세연구원 조세연구본부)

주 최 : 사)선진복지사회연구회, 리더십한림원, 사회복지교육실천포럼, 한국사회복지포럼
후 원 : 행정자치부

● 2017. 02. 23 프레스센터 18층 외신기자클럽

프리미엄 특강 1. **한국 복지정책의 효율성-균형의 길**
-정 경 배 (전 한국보건사회연구회 원장)
프리미엄 특강 2. **한국사회복지 미래와 과제**
- 김 진 수 교수 (연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주 최 : 사) 선진복지사회연구회
후 원 :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 2016. 12. 02 광화문 프레스센터 20층 프레스클럽

'위기의 한국, 어떻게 바꿀 것인가?

제 1주제 : 일과 빵의 균형개혁

주제 발표자 : 정 경 배 (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
토론자 : 김 도 형 (한림대학교 겸임교수)

제 2주제 : 특권과 반칙없는 공정사회

주제 발표자 : 고 재 방 (전 교육부 차관보)
토론자 : 최 영 관 (전남대학교 명예교수)
1, 2 부 사회 : 이 정 숙 사)선진복지사회연구회
공 동 주 최 : 리더십한림원, 사)선진복지사회연구회

● 2016. 11. 24 국가인권위원회 11층 배움터

주 제 : 2016 청소년유해방송물모니터링사업 결과 보고 겸한 토론회

주제발표자 : 성 윤 숙 연구위원(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토론자 :
1. 김 경 수 대학생(단국대학교 경영학과)
2. 최 옥 주 교수(건국대학교 영육아보육학과)
3. 박 열 규 강사(경민대학교 효충교육원)
4. 박 찬 균 편집국장(복지연합신문)
5. 한 병 재 감사(한국가정법률상담소 성남지소)
6. 양 혜 지 간사(선진복지사회연구회)

사 회 : 박미출 원장(한국정책연구원)
후 원 : 여성가족부, 국민대통합위원회

● 2016 .10.26 국가인권위원회 11층 배움터

주 제: 고령화시대의 보건의료 과제와 정책제안

주제발표자: 이 진 석 교수 (서울대 의대)
토 론 자:
1. 이 진 한 차장 (동아일보 의학전문기자)
2. 정 순 둘 교수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3. 박 은 자 센터장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의료연구실 보건의료정책연구실)
4. 최 기 춘 실장 (건강보험공당 보험정책연구실)

후 원 : 행정자치부, 국민대통합위원회

● 2016. 06. 21 국가인권위원회 11층 배움터

주 제 : 중장년층의 주거복지 정책과제와 대안

발제 1 : 신 성 식 기자 (중앙일보 복지전문기자/ 부국장)
발제 2 : 이 연 숙 교수 (연세대학교 주거복지연구단 단장)
패널 :

1. 박 신 영 소장 (한국도시연구소)
2. 구 혜 영 교수 (한양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3. 박 재 만 과장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1부 사회 : 고 은 지 박사(본 연구회 이사/ 어린이집 원장)
2부 사회 : 이 정 숙 회장(선진복지사회연구회)
후 원: 행정자치부, 보건복지부, 국민대통합위원회
* e-run TV인터넷 생방송, 데일리안, 한국 NGO 신문 외 5개 언론보도

● 2016. 02. 03 국회의원회관 제 2 소회의실, 공동주최: 이주영의원실

주 제 : 중앙-지방간 복지재정효율화를 위한 개선 방안

주제 발표자 : 류 진 석 교수 (충남대학교 사회복지학과)
토론자:
1. 신 성 식 중앙일보 (보건복지전문기자/논술위원)
2. 김 태 일 교수 (고려대학교 행정학과)
3. 천 우 정 심의관 (국회사무처 행정법제)
4. 박 인 환 교수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변호사)
5. 고 경 환 실장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정보통계연구실)

축 사 : 김 무 성 새누리당 당대표
서 상 목 前 보건복지부장관/ 지속기능경영재단 이사장/ 본 연구회 고문
김 득 린 전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회장/ 송암복지재단 이사장

1부 사회 : 조 명 숙 교수(본 연구회 부회장)
2부 사회 : 황 명 진 교수 (고려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본 연구회 이사)
* 국회방송, 한국정책방송 중계. 성남일보. e-runtv 인터넷 생중계
* 중앙일보 등 다수 언론에 노출 됨

● 2015. 10. 22 토론회 광화문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

주 제 : 취약계층 베이비부머세대를 위한 일자리 정책 현황과 제안
(*토론책자 국립중앙도서관에서 보존, 전수, 이용을 위하여 도서관법 제 20조에 근거한 요청으로 제공)

주제 발표자 : 김 주 섭 선임연구위원 (한국고용노동연구원)
토론자 :
1. 이 준 우 교수(강남대학교 사회복지학과)
2. 김 정 태 센터장(서울시 도심권인생이모작지원센터)
3. 김 동 준 센터장(전경련 중장년일자리 희망센터)
4. 정 양 범 부장(매일경제 생애설계센터 센터장)
5. 이 수 민 (국민연금서울북부지역본부 본부장)

축 사 : 서 상 목 前 보건복지부장관/ 지속기능경영재단 이사장/ 본 연구회 고문
1부 사회 : 최 옥 주 (본 연구회 부회장/건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초빙교수)
2부 사회 : 이 정 숙 (사)선진복지사회연구회 회장)

후 원 : 행정자치부. 대통령직속 국민대통합위원회

● 2015. 7. 9 토론회 광화문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

주 제 : 취약계층 베이비부머세대의 노후 준비 실태와 정책과제

(*토론책자 국립중앙도서관에서 보존, 전수, 이용을 위하여 도서관법 제 20조에 근거한 요청으로 제공)

주제 발표자 : 정 경 희 센터장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인구정책연구실 고령사회연구센터)

토론자:

1. 김 헌 수 박사 (국민연금연구원 연금제도 팀장)
2. 이 상 철 팀장 (한국경영자총협회 사회정책)
3. 김 경 록 소장 (미래에셋은퇴연구소)

축 사 : 김 영 래 현 아주대 명예교수/ 전 동덕여대 총장

조 성 철 본 연구회 고문/ 한국사회복지공제회 이사장

1부 사회 : 고 은 지 (본 연구회 부회장)

2부 사회 : 이 정 숙 사)선진복지사회연구회 회장

후 원 : 행정자치부

협 찬 : 국민연금공단

*** 연합 외 12개 언론 기사

● 2015. 2. 26 토론회 국가인권위원회 8층 배움터

주 제 : 남북한 통일 후 사회보장체계 통합방안-북한의 사회안전망 구축중심으로

(*토론책자 국립중앙도서관에서 보존, 전수, 이용을 위하여 도서관법 제 20조에 근거한 요청)

주제 발표자 : 최 균 교수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연구원 원장/ 한림대학교사회복지학과)

토론자 :

1. 고 수 석 연구위원 (중앙일보 통일문화연구소)
2. 유 근 춘 박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3. 김 은 주 소장 (통일준비위원회 사회문화분야 전문위원/ 한국여성정책연구소)
4. 김 원 섭 교수 (고려대학교 사회학과)
5. 은 성 호 과장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과)

축 사 : 유 지 수 총장 (국민대학교)

1부 사 회 : 조 명 숙 교수 (본 연구회 부회장)

2부 사 회 : 이 정 숙 회장 (사)선진복지사회연구회)

● 2014. 10. 22 토론회 국가인권위원회 8층 배움터

주 제 : 공무원연금. 문제의 핵심과 해결방안

(*토론책자 국립중앙도서관에서 보존, 전수, 이용을 위하여 도서관법 제 20조에 근거한 요청으로 제공)

주제 발표자 : 김 진 수 교수 (연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좌 장 : 도 미 향 회장 사)선진복지사회연구회 회장/남서울대학교 교수

토론자 :

1. 김 재 진 박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본부장)
2. 최 진 봉 교수 (성공회대학학교 신문방송학과)
3. 유 근 형 기자 (동아일보 정책사회부)

축 사 : 박 범 진 이사장 (미래정책연구소/ 선진복지사회연구회 고문)

사 회 : 김 혜 숙 교수 (백석대학교 사회복지학과)

● 2014. 6. 20 토론회 국가인권위원회 8층 배움터

주 제 :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개선방안

주제 발표자 : 황 명 진 교수(고려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좌 장 : 도 미 향 회장 (사)선진복지사회연구회 회장/남서울대학교 교수)

토론자 :

1. 양 점 도 교수 (한국복지행정학회 회장/ 경북대학교 교수)
2. 구 종 회 석좌교수 (동방대학원대학교 석좌교수)
3. 양 성 근 회장 (한국사회복지행정연구회 회장)
4. 권 오 영 변호사 (인천시 사회복지협의회 부회장)
5. 이 동 우 사무관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정책과)

축 사 : 최 성 균 회장 (한국사회복지미래경영협회)

사 회 : 김 준 경 교수 (남서울대학교)

● 2014. 4. 30 토론회 남서울대학교 아동복지학관 501호

제 1 주제: '저출산 원인과 대책'

주제 발표자: 양 찬 희 과장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제 2 주제; '출산장려를 위한 일가정 양립정책'

주제 발표자: 이 삼 식 박사 (보건사회연구원 인구정책연구본부장)

제 3 주제: '출산장려를 위한 보육 및 일.가정 양립정책'

주제발표자: 도 미 향 회장 (사)선진복지사회연구회 / 남서울대학교 교수)

좌 장 : 김 한 곤 회장 (한국인구학회/ 영남대학교 교수)

토론자:

1. 박 미 숙 과장 (천안시 여성가족과)
2. 김 태 희 교수 (백석문화대 / 천안시 직장맘지원센터장)
3. 이 명 숙 교수 (경기과학기술대학교 교수)
4. 이 은 하 분과장 (천안시 어린이집 연합회 가정분과)

축 사 : 공 정 자 총장 (남서울대학교)

주 최 : 사)선진복지사회연구회, 천안시, 남서울대학교

후 원 : 보건복지부

● 2013. 11. 14 (목) 토론회 국가인권위원회 8층 배움터

주 제 : 복지사각지대 빈곤층의 정책과제와 대안

주제 발표자 : 강 명 순 이사장 (사단법인 세계빈곤퇴치회)

토론자:

1. 박 병 현 교수 (부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2. 이 태 진 박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정책연구본부장)
3. 서 병 수 소장 (한국빈곤문제연구소)

축 사 : 조 성 철 회장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오 영 숙 (전 세종대학교 총장/ 본 연구회 고문)

1부 사회 : 김 혜 숙 교수 (백석대학교 사회복지학과)

2부 사회: 이 정 숙 회장 (사)선진복지사회연구회)

후 원 : 국민연금공단

● 2013. 7. 5 (금) 토론회 국가인권위원회 8층 배움터

주 제 : 창조경제를 통한 한국형 복지전략

주제 발표자 : 안 상 훈 교수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국민경제자문회의 민생경제분과위원장)

토론자 :

1. 김 정 근 박사 (삼성경제연구소 경제정책실 수석연구원)
2. 최 균 교수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연구원 원장/한림대학교사회복지학과)
3. 이 창 곤 소장 (한겨레 사회정책연구소)
4. 유 종 일 교수 (KDI 국제정책대학원)
5. 허 재 준 (한국노동연구원 고용정책연구본부장)

축 사 : 차 흥 봉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회장/전 보건복지부 장관/ 본 연구회 고문

오 영 숙 전 세종대학교 총장 / 본 연구회 고문

1부 사회 : 정 윤 경 소장 (말샘/글샘언어교육연구소/ 본 연구회 운영위원)

2부 사회 : 이 정 숙 회장 사)선진복지사회연구회 (영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겸임교수)

후 원 : 현대자동차

● 2013. 3. 7(목) 사단법인 허가 및 창립 3주년기념 토론회 광화문 프레스센터

주 제 : 새 정부에 바라는 복지정책의 방향-주요 대선복지공약을 중심으로

주제발표자 : 허 준 수 교수(숭실대 사회복지학부/경실련사회복지위원장)

토론자 :

1. 신 성 식 기자 (중앙일보 사회복지전문)
2. 정 은 상 님 (일반시민패널공모 선정)
3. 현 진 권 소장 (한국경제연구원 사회통합센터)
4. 김 동 열 실장 (현대경제연구원 기업정책연구실/수석연구위원
5. 김 명 훈 박사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자격제도위원장/강남세브란스병원사회사업팀장)
6. 김 재 진 박사 (한국조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축 사 : 차 흥 봉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회장(전 보건복지부 장관)

김 성 호 행복세상 이사장(전 법무부장관)
김 영 래 동덕여자대학교 총장 (전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상임공동대표)
오 제 세 국회의원 (국회보건복지위원장)
축시낭송 : 정 윤 경 (본 연구회 운영위원)
1부 사회 : 도 미 향 교수 (남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본 연구회 이사)
2부 사회 : 이 정 숙 회장 선진복지사회연구회 (영동대학교사회복지학과 겸임교수)
후 원 : 국민건강보험

● 2012, 10, 25 토론회 광화문 프레스센터19층 기자회견장

주 제 : 건강보험 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방향 및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재원확보 방안

주제 발표자 : 신 영 석 부원장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토론자 :
1. 김 동 섭 조선일보 사회복지전문기자
2. 이 준 우 교수 (강남대학교 사회복지전문대학원 원장)
3. 조 중 근 건강복지공동회의 공동대표
4. 박 민 수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 과장
5. 김 선 희 한노총 사회정책국장
6. 윤 철 수 의료개혁국민연대 대표

축 사 : 김 정 례 전 보건복지부 장관
유 양 근 강남대학교 부총장 / 본 연구회 고문
1부 사회 : 나 임 순 교수 (백석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본 연구회 이사)
2부 사회 : 이 정 숙 회장 (사단법인 선진복지사회연구회)
후 원 : 홈플러스

● 2012. 6. 26 토론회 광화문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

주 제 : 경제민주화를 통한 복지의 이상과 현실
주제 발표자 : 이 준 영 교수 (서울시립대학교 사회복지학과)
토론자 :
1. 신 인 석 교수 (중앙대 경영학과)
2. 이 의 영 교수 (경실련 전 상집위원장/ 군산대 경제학과)
3. 김 광 기 경제선임기자 (중앙일보 경제연구소 부소장)

축 사 : 심 윤 종 총장(前 성균관대학교 / 국민희망포럼 이사장)
임 성 택 총장 (그리스도대학교)
1부 사회 : 진 석 범 교수 (동서울대학교 실버복지학과/ 성남시사회복지사협회 회장/본 연구회 이사)
2부 사회 : 이 정 숙 회장 (선진사회복지연구회)
후 원 :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한국미래정책연구원
※mbc 뉴스 토론회 풀영상을 통해 전 내용을 다 볼 수 있습니다.

● 2012. 3. 9 토론회 광화문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

주 제 : 복지와 고용이 함께 가는 복지국가-새로운 복지패러다임의 모색

주제 발표자 : 홍 경 준 교수 (성균관대학교 사회복지학과)

토론자 :

1. 박 미 출 (일반시민토론자 신청공모자에서 선정)
2. 허 준 수 교수 (경실련 사회복지위원장/숭실대 사회복지학과)
3. 이 정 한 과장 (고용노동부 노동시장정책과)
4. 박 기 환 교수 (국민대학교 경영대학/ 본 연구회 이사)
5. 류 기 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사회정책본부장

축 사 : 조 성 철 회장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박 인 복 회장 (소기업소상공인연합회)

구 본 홍 사장 (cts기독교TV)

최 란 이사장 (대한민국 서울문화예술협회)

1부 사회 : 나 임 순 교수 (백석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본 연구회 이사)

2부 사회 : 이 정 숙 회장 (선진사회복지연구회)

후 원 : 고용노동부, CTS기독교TV

협 찬 : 대구은행

*** 연합, 뉴시스 및 5개 언론 기사

● 2011. 12. 20 창립 2주년 겸한 토론회 광화문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

주 제 : 누가, 어디에 기부하고 자원 봉사하는가?ㅡ나눔 주체 및 선호에 대한 이해

주제발표자: 강철희 교수 (연세대 사회복지학과)

토론자:

1. 강 학 봉 사업본부장 (사회공동모금회)
2. 임 혜 성 팀장 (보건복지부 나눔정책팀)
3. 곽 대 석 사무국장 (cj 나눔 사무국)
4. 김 현 옥 회장 (한국자원봉사관리협회)
5. 안 명 옥 前국회의원/나눔공동체

축 사 : 차 흥 봉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회장/ 본 연구회 고문)

김 원 길 (전 보건복지부 장관)

오 영 숙 (전 세종대 총장/ 본 연구회 고문)

1부 사회 : 석 말 숙 교수 (나사렛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본 연구회 이사)

2부 사회 : 이 정 숙 회장 (선진사회복지연구회)

후 원 : 보건복지부, IBK기업은행,CTS기독교TV

축 가 : 소프라노 이윤순

<시월의 어느 멋진 날에>, 'Memory'(추억), <캣츠>

*** 연합 및 언론사 6기사보도

● 2011. 9. 27 토론회 서울 광화문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

주 제 : 한국 복지재정의 효율성 및 장기적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과제

주제발표자 : 고 영 선 연구본부장 (한국개발연구원)

토론자 :

1. 박 용 오 사무총장 (한국사회복지사협회)
2. 홍 백 의 교수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3. 김 재 진 박사 (한국조세연구원 예산분석센터장)
4. 장 상 수 삼성경제연구소 연구위원/선무

축 사 : 심 윤 종 前 성균관 대학교 총장/국민희망포럼 이사장

1부 사회 : 박 서 영 교수 (신구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본 연구회 이사)

2부 사회 : 박 기 환 교수 (국민대학교 경제학과/ 본 연구회 이사)

후 원 : SK사회적기업지원단

*** 뉴시스 및 연합 등 5개 언론사기사

● 2011. 6. 14 토론회 서울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

주 제 : 베이비부머세대의 전망과 정책과제

주제 발표자 : 김 용 하 원장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토론자 :

1. 김 미 혜 교수 (이화여대 사회복지전문대학원 원장)
2. 이 기 영 단장 (보건복지부 베이비부머정책기획 총괄)
3. 우 재 룡 소장 (삼성생명은퇴연구소)
4. 최 용 민 님 (베이비부머해당 토론자 신청공모에서 선정된 일반시민)

축 사 : 김 성 이 前 보건복지부 장관

조 성 철 한국사회복지사 협회 회장

오카리나 특별연주 : 오영숙 前세종대 총장(본 연구회 고문)

1부 사회 : 진 석 범 교수 (동서울대 실버학과)

2부 사회 : 이 정 숙 회장 (선진사회복지연구회)

후 원 : 삼성생명, 한국경제신문

※mbc 뉴스 토론회 풀영상을 통해 전 내용을 다 볼 수 있습니다.

뉴시스 및 6개 언론사 기사 게재

● 2011. 2. 17 토론회 서울 광화문 프레스센터 19층

주 제 : 저출산대책변화의 함의와 향후과제

주제발표자 : 이 삼 식 박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저출산고령사회연구실장)

토론자 :

1. 정 영 훈 과장 (대통령직속기관 미래기획위원회 사회복지정책과)
2. 도 미 향 교수(남서울대학교 아동복지학과)
3. 안 명 옥 이사장 (한국여성인권진흥원/17대 국회의원)

4. 류 기 정 사회정책본부장 (한국경영자총협회)

축 사 : 진 수 희 보건복지부장관

차 흥 봉 회장 (한국사회복지협의회/ 前 보건복지부장관)

오 영 숙 총장 (前세종대총장)

축 가 : 장 선 주 (바리톤). 이동형(테너)

1부 사회 : 도 미 향 교수 (남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본 연구회 이사)

2부 사회 : 이 정 숙 회장 (선진사회복지연구회)

후 원 : 보건복지부, 대통령미래기획위원회, 롯데백화점

※mbc 뉴스 토론회 풀영상을 통해 전 내용을 다 볼 수 있습니다.

연합뉴스, 데일리안, 뉴시스, 뉴일리, 조선일보

● 2010. 10. 01 토론회 성남시청 3층 대회실

주 제 : 고령화시대 경제성장의 뒤안길에 선 한국 노인들

주제 발표자 : 최 성 재 교수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한국노인인력개발원 이사장)

토론자 :

1. 나 임 순 교수 (백석대학교)
2. 신 영 석 박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보험연구실장)
3. 곽 순 헌 서기관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
4. 김 영 진 회장 (성남시 노인복지시설연합회)

축 사 : 차 흥 봉 前 보건복지부 장관 (2013년 세계노년학·노인의학대회 대회장)

1부 사회 : 박 기 환 교수 (국민대학교 경영학과/ 본 연구회 이사)

2부 사회 : 이 정 숙 회장 (선진사회복지연구회)

후 원 : 성남시, S·K사회적기업지원사업단

● 2010. 07. 12 서울 광화문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

주 제 : 한국적 사회적기업의 전망과 과제 -지역밀착형 사회적기업을 중심으로

주제 발표자 : 정 무 성 원장 (前숭실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노동부 사회적기업육성위원)

토론자 :

1. 박 헌 준 교수 (연세대학교 사회적기업지원세터소장)
2. 김 재 춘 정책국장 (아름다운가게)
3. 정 태 길 사무국장 (함께 일하는 재단)
4. 박 찬 민 총괄실장 (S.K사회적기업지원사업단)
5. 윤 준 현 대표 (주)에이스푸드
6. 모 동 희 대표 남한산성반딧불이학교(예비사회적기업)

축 사 : 오 영 숙 전 세종대 총장

축사문 보내주신분 : 오 세 훈 서울시장, 이재선 국회보건복지위원장

1부 사회 : 이 승 훈 교수 (국제대학교)

2부 사회 : 이 정 숙 회장 (선진사회복지연구회)

※mbc 뉴스 토론회 풀영상을 통해 전 내용을 다 볼 수 있습니다.

● 2010. 02. 25 토론회 성남 신청사 대강당(온누리관)

주 제 : 사회복지사업의 지방이양과 지역복지발전의 과제

주제 발표 : 백 종 만 학장 (전북대학교 사회과학대학)

토론자 :

1. 진 석 범 교수 (동서울대학교)
2. 장 향 만 사무관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 지역복지과)
3. 이 애 련 교수 (경원대학교 아동복지학과)
4. 장 윤 영 도의원 (한나라당)
5. 지 관 근 시의원 (민주당)

축 사 : 장 석 권 前 단국대 총장

김 경 우 회장 (성남시 사회복지연합회/을지대 교수)

● 2009. 12. 10 오전 11시, 창립기념 제 1차 토론회

주 제 : 미래한국 복지건설을 위한 신구상

주제 발표자 : 강 욱 모 교수 (국립 경상대학교 사회복지학과)

토론자 :

1. 김 병 숙 교수 (건국대학교행정문제연구소 책임연구원)
2. 김 창 남 교수 (경희대학교 언론정보대학원 정치학박사)
3. 조 순 태 소장 (강남성폭력상담소, 한국사회문제연구원)
4. 정 무 성 교수 (숭실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원장)

축 사 : 박 범 진 前 총장 (한성디지털대학교/ 현 미래정책연구소 이사장)

▣ 공 지 사 항 ▣

1. 토 론 회

-일시: 2022. 11. 08 (화) 오후 2시

-장소: 성남아트센터 사무동 1층 컨퍼런스홀

-포스터 첨부

2. 토 론 회

-일시: 2022.11. 16 (수) 오후 2시 30분

-장소: 프레스센터 18층 외신기자클럽

-포스터 첨부

3. 중장년층과 어르신이 함께 하는 제주농촌일솝돕기 및 공감여행

-일시: 2022년 11월 29~12월1일(2박3일)

-장소: 제주도(거문오름, 성산일출봉, 감귤농장 등)

4. 자원봉사

-일시: 2022년 성탄절

-장소: 성남 모란 '안나의 집'

-참여대상자: 남녀노소 불문

*아래 주소를 클릭 하는 순간 우리의 삶의 질이 바뀔 수 있습니다.

1) https://www.youtube.com/channel/UCVqg_WH11FaBCAx-KZ3lnKg 유튜브 주소

2) www.sswkorea.org 홈페이지 동영상 자료실

3) 예약된 Zoom 회의에 귀하를 초대합니다.
   Zoom 회의 참가 https://us02web.zoom.us/j/9959424971 회의 ID: 995 942 4971

▣ 협 력 기 관 ▣

유한대학교 (총장 이 권 현)
사회안전범국민포럼 (상임대표 백 봉 현)
사)화순군 귀농귀촌정보센터 (센터장 전 승 규)
사)한국사회교육복지회 (대표 최 용 희)
사)한국유스호스텔 연맹 (총재 임 성 준)
서울문화예술 대학교 실버문화경영학과 (학과장 조경훈)
사회복지교육실천포럼 (회장 성 규 탁)
사)여성자원금고 (이사장 김 근 화)
사)한국난임가족연합회 (회장 박 춘 선)
여성장애인 어울림센터 (센터장 강 경 아)
남서울대학교 복지경영대학원 코칭학과 (학과장 도 미 향)
상명대학교 환경조경학과 (학과장 강 현 정)
리더십 한림원 (원장 정경배)
휴먼서비스아카데미 (원장 최 은 미)
대한민국리더스포럼: 배려와 섬김 (회장 박 창 수)
서울특별시사회복지협의회 (회장 정 연 보)
사)한국소아당뇨인협회 (회장 김 광 훈)
비)아동안전위원회 (회장 이 제 복)
사)한국지속가능기업연구회 (회장 조 중 근)
한국사회봉사연합회 (회장 이 진)
대구대학교 고령사회연구소(소장 김 미 령)

"복지는 우리의 작은 사랑과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우리의 관심과 참여가 대한민국을 선진복지국가로 만듭니다."

● 후원계좌

1005-002-894690(우리) 예금주: 사단법인 선진사회복지연구회

● 사단법인 선진복지사회연구회 구성원이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2silent@hanmail.net 070-8793-5202

● '한국 사회적기업의 전망과 과제'(2010.7.16), '저출산 대책변화의 함의와 향후과제'((2011.2.18), '베이비부머세대의 전망과 정책과제'(2011.6.15), '경제민주화를 통한복지의 이상과 현실'(2012,6,29) 토론회를 MBC뉴스 토론회 풀영상 이나 본 연구회 홈페이지에서 전 내용을 다 볼 수 있습니다.

● 2014.10.22『공무원연금, 문제의 핵심과 해결방안』, 2015.2. 26『남북한 통일 후 사회보장체계 통합방안-북한의 사회안전망 구축을 중심으로』, 2015.7.9『취약계층 베이비부머세대의 노후준비 실태와 정채과제』, 2015.10.22『취약계층 베이비부머세대를 위한 일자리정책의현황과 정책제안』 토론책자는 국립중앙도서관 요청으로 도서관법 제 20조근거로 보존 ,전수, 이용 되고 있습니다.

● 2020년 6월 3일 '코로나사태의 지역보건과 커뮤니티케어의 역할과 전망' 토론회는 1)본 연구회 홈페이지 동영상 자료실과 2)국회방송 주소 3)복지 TV를 클릭하시면 본 토론회를 다시 보기 할 수 있습니다.
1) 연구회 홈페이지 동영상 자료실www.sswkorea.org
2) 국회방송 https://www.natv.go.kr/renew09/brd/formation/last_pro_vw_detail.jsp?programId=859&infoId=34414&index=942&gotopage=4
3) 복지 TV https://tv.naver.com/v/14221827

제 3의
송파·수원 세모녀 사건
어떻게 막을 것인가?

일시 2022.10.26. (수) 오전 10시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

공동주최 사단법인 선진복지사회 연구회
국민의힘 약자와의동행위원회
국회의원 김미애 국회의원 이종성

후 원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발제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포함한 소득보장제도 개선방향

발제자 윤성원 입법조사관(국회입법조사처)

토론자 박영용 회장(한국사회복지행정연구회)

발제 2 세모녀의 사회복지 - 현실과 대책

발제자 정재훈 교수(서울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토론자 김태완 연구실장(한국보건사회연구원 빈곤평등연구실)
정중규 정책실장(한국사회복지정책연구원)

* 본 토론은 YouTube 사)선진복지사회연구회 를 통해 생방송으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협력단체 | 범사회시민단체연합, 사)한국지속가능기업연구회, 한국사회봉사단연합회, 한국공공복지연구소, 환경과복지를생각하는시민의모임, 한국여성사회복지사회

민선 8기
성남시민 맞춤형 사회복지의 과제와 전망

일 시	2022.11.08 (화) 오후 2시
장 소	성남시 성남아트센터 사무동 1층 컨퍼런스홀
공동주최	사단법인 선진복지사회연구회, 성남시민연대, 대안연대
후 원	행정안전부
주 제	민선 8기 성남시민 맞춤형 사회복지의 과제와 전망
모두발언	서 민 공동대표 (대안연대/ 단국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발 표 자	이 준 우 교수 (강남대학교 사회복지학부)
토 론 자	1) 정 효 신 센터장 (굿피플장애인활동지원기관) 2) 석 춘 지 前 성남위례종합사회복지관 관장 3) 박 영 애 前 성남시의원 4) 조 기 풍 회계사 5) 남 천 우 관장 (상대원1동복지회관)

YouTube facebook 사)선진복지사회연구회, 대안연대 를 통해 생방송 시청 바랍니다.

협력단체: 범시민사회단체연합, 사)한국지속가능기업연구회, 한국사회봉사단연합회
한국복지공공연구소, 환경과복지를생각하는시민의모임, 공정언론국민연대

일 시	2022.11. 16 (수) 오후 2시 30분
장 소	서울 프레스센터 18층 외신기자클럽
주 최	사단법인 선진복지사회연구회
후 원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주 제	인터내셔널 사회복지와 국제협력
발표자	황 명 진 교수 (고려대학교 행정전문대학원사회복지학과)
토론자	1) 강 대 성 고문 (굿피플) 2) 장 영 신 정책연구실장 (한국사회복지협의회) 3) 한 창 근 교수 (성균관대학교 사회복지학과) 4) 김 윤 섭 센터장 (고려대학교의료원 사회공헌사업본부국제협력센터)

YouTube facebook 사)선진복지사회연구회 를 통해 생방송 시청 바랍니다.

협력단체: 범시민사회단체연합, 사)한국지속가능기업연구회, 한국사회봉사단연합회
한국복지공공연구소, 환경과복지를생각하는시민의모임, 공정언론국민연대

대한민국국회

한국 연금체계의 개혁 방향과 과제

2022. 06. 29 (수) 오후 2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공동주최 성 일 종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의장

사단법인 선진복지사회 연구회

후 원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격 려 사 이 갑 산 명예회장(범시민사회단체연합)

발 표 자 오 건 호 정책위원장(내가만드는복지국가)

좌 장 이 용 하 박사(前국민연금연구원장)

토 론 자 김 원 섭 교수(고려대학교 사회학과)
강 성 호 박사(보험연구원)
주 은 선 교수(경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본 토크콘서트는 유튜브를 통해 생방송으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YouTube 에서 사)선진복지사회연구회 를 검색하세요.

협력단체 | 범사회시민단체연합, 사)한국지속가능기업연구회, 한국사회봉사단연합회, 공정언론국민연대, 환경과복지를생각하는시민의모임

최연혁 교수 초청 토크콘서트

新국제질서와 한국정치의 도전:

복지 및 주요 정책과 제도의 정치적 대응력 진단

일시 2022. 5. 19 (목) 오후 2시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 2 소회의실

공동주최 국회의원 송 석 준

사단법인 선진복지사회 연구회

축사 서 상 목
-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회장
- 前 보건복지부 장관

격려사 차 흥 봉
- 초록우산어린이재단 대표이사
- 前 보건복지부 장관

후원 행정안전부

*본 토크콘서트는 유튜브를 통해 생방송으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YouTube 에서 사)선진복지사회연구회 를 검색하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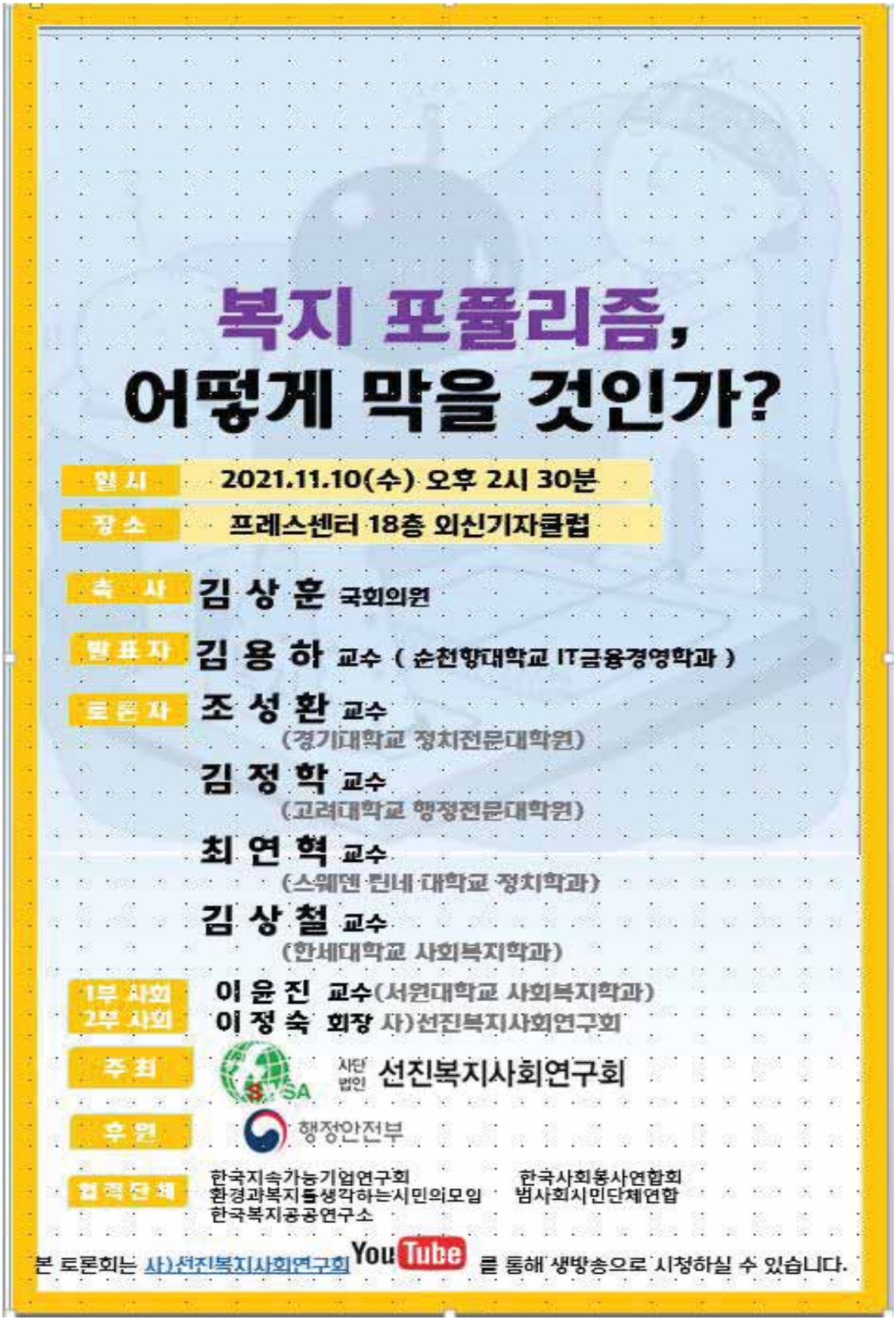
초청 교수

최 연 혁 교수

·스웨덴 린네대학교 정치학과

협력단체 | 범사회시민단체연합, 사)한국지속가능기업연구회, 한국사회봉사단연합회, 한국복지공공연구소, 환경과복지를생각하는시민의모임

차기 정부에 바라는 복지정책
-사회복지, 보건의료, 고용노동, 교육, 주거(부동산)-
일시 2021.12.10(금) 오후 2시 30분
장소 프레스센터 18층 외신기자클럽
기조발제 및 사회복지
최 균 교수 (한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보건 · 의료
이 기 효 교수 (인제대학교 보건대학원)
고용 · 노동
이 지 만 교수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교 육
양 정 호 교수 (성균관대학교 교육학과)
주거(부동산)
서 진 형 교수
(경인여자대학교/대한부동산학회 회장)
김 미 령 교수(대구대학교 지역사회개발복지학과)
주최 사단법인 선진복지사회연구회
후원 행정안전부
협력단체 한국지속가능기업연구회 한국사회봉사연합회
환경과복지를생각하는시민의모임 범사회시민단체연합
한국복지공공연구소 대구대학교 고령사회연구소
본 토론회는 사)선진복지사회연구회 YouTube 를 통해 생방송으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복지 포퓰리즘,
어떻게 막을 것인가?
일 시 2021.11.10(수) 오후 2시 30분
장 소 프레스센터 18층 외신기자클럽
축 사 김 상 훈 국회의원
발 표 자 김 용 하 교수 (순천향대학교 IT금융경영학과)
토 론 자 조 성 환 교수
(경기대학교 정치전문대학원)
김 정 학 교수
(고려대학교 행정전문대학원)
최 연 혁 교수
(스웨덴 린네 대학교 정치학과)
김 상 철 교수
(한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1부 사회 이 윤 진 교수(서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2부 사회 이 정 숙 회장 사)선진복지사회연구회
주 최 사단법인 선진복지사회연구회
후 원 행정안전부
협력단체 한국지속가능기업연구회
환경과복지를생각하는시민의모임
한국복지공공연구소
한국사회봉사연합회
범사회시민단체연합
본 토론회는 사)선진복지사회연구회 YouTube 를 통해 생방송으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중장기
재정 건전성 유지를 위한 정책 방향
일시 2021.10.19(화) 오후 2시 30분
장소 프레스센터 18층 외신기자클럽
축사 이 효 수 前 영남대학교 총장
발표자
김 우 철 교수 (서울시립대학교 세무학과)
좌장
황 명 진 교수 (고려대학교 사회복지학과)
토론자
이 태 석 연구위원
(한국개발연구원 공공경제연구부)
주 원 실장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
이 영 숙 센터장
(한국 보건사회연구원 사회보장재정통계연구센터)
정 창 률 교수
(단국대학교/ 경실련 사회복지위원장)
1부 사회 김 기 영 겸임교수(중앙대학교 행정대학원)
주최 사단 법인 선진복지사회연구회
후원 행정안전부
협력단체 한국지속가능기업연구회
환경과복지등생각하는시민의모임
한국복지공공연구소
한국사회봉사연합회
범사회시민단체연합
본 토론회는 사)선진복지사회연구회 YouTube 를 통해 생방송으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 플랫폼 토론회

일시 2021. 9. 15 (수) 오후2시30분

장소 프레스센터 18층 외신기자클럽

주제

차기 정부의 복지 : 사회복지 발전을 위한 복지플랫폼이 필요하다.

발표자

김 원 식 교 수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토론자

장 영 신 정책연구실장 (한국사회복지협의회)

박 영 용 회 장 (한국사회복지행정연구회)

김 광 병 교 수 (청운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인천 남동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공동위원장)

김 은 하 센터장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연구센터)

이 상 철 실 장 (한국경영자총협회 홍보실)

주최 사단법인 선진복지사회연구회

후원 행정안전부

본 토론회는 사)선진복지사회연구회 YouTube 를 통해 생방송으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6.33명
(1965)
2.06명
(1983)
1.23명
(2010)
0.98명
(2018)
0.84명
(2020)
코로나베이비,
출생감소 대안은 없나?
2021.08. 24(화) 오후 2시 30분
프레스센터 18층 외신기자클럽
축사 김상훈 국회의원
양금희 국회의원 (저출생 · 인구절벽대응국회포럼 공동대표)
김창순 회장 (인구보건복지협회)
주제 발표자
김동섭 교수
(한림대학교 보건과학대학원 /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
토론자
박기남 위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위원)
이윤진 교수
(서원대학교 사회복지학부)
박선권 입법조사관
(국회입법조사처 사회문화조사실 보건복지여성팀)
김충환 과장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총괄과)
주최 사단법인 선진복지사회연구회
후원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협력단체 한국지속가능기업연구회
환경과복지를생각하는시민의모임
한국사회봉사연합회
범사회시민단체연합
본 토론회는 사)선진복지사회연구회 YouTube 를 통해 생방송으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청년 일자리, 어떻게 해결 할 것인가?

일 시 2021.06.16 (수) 오후 2시 30분

장 소 프레스센터 19층 매화홀

축 사 김 대 환 전 노동부 장관

격 려 사 이 갑 산 명예회장 (범사회시민단체연합)

주 제 발 표 김 태 기 교수
(단국대학교 경제학과)

토 론 자

1. 이 형 준 본부장
(한국경영자총협회 고용사회정책본부)
2. 김 주 섭 선임연구위원
(한국노동연구원 고용정책연구본부)
3. 이 재 모 교수
(영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사회복지학과)
4. 김 대 광 청년
(취업이후 창업)

본 토론회는 사)선진복지사회연구회 유튜브, ZOOM 링크를 통하여 생방송으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링크 사)선진복지사회연구회

ZOOM 링크 회의 : ID 995 942 4971

주 최 사단법인 선진복지사회연구회

후 원 행정안전부

협 력 단 체 사)한국지속가능기업연구회 한국사회봉사연합회

환경과복지를 생각하는시민의모임 범사회시민단체연합

2022.5.26 "제 8회 중장년세대 Re-Challenge 한마당!

2022.10. 15 중장년층 농촌일손돕기 및 멘토링 공감여행 (충북 보은 대추)